

第248回國會  
(臨時會)

#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7月6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간사선임의견
2. 현황보고
  -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 나. 대한민국학술원
  - 다. 국사편찬위원회
  - 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마. 국제교육진흥원
  - 바. 국립특수교육원

## 審査된案件

- |                       |   |
|-----------------------|---|
| 1. 간사선임의견 .....       | 3 |
| o 간사(조배숙·이주호)인사 ..... | 3 |
| 2. 현황보고 .....         | 4 |
|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   |
| 나. 대한민국학술원            |   |
| 다. 국사편찬위원회            |   |
| 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
| 마. 국제교육진흥원            |   |
| 바. 국립특수교육원            |   |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구기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교육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역량이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저에게 부여된 책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17대 국회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신 우리 위원님들의 면면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제한된 물질 자원에서 무한한 지식의 힘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의 목표나 방향이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가는 그동안 대학경쟁력의 강화, 공교육 내실화 등에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새롭게 구성된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고 낡은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은 확고한 교육철학과 과학적인 교육원리를 기반으로 검증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대 국회 때에는 교원정년을 비롯한 교권의 문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의 중심 과제가 되었고, 지난 16대 때에는 유아교육 시대를 연 유아교육법이 중심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광범위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질 관리 문제, 교육자치 개혁, 사립학교를 비롯한 사학 문제, 대학 재정 문제,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 지역 문제, 효행법 제정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많은 문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전문성 못지않게 일관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고 선진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교육정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국회에서 일관된 교육정책이 주관되어 오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보다 더 강력한 전문화와 일관성 있는 안정성을 도모해서 모든 국민의 이러한 여망을 최선을 다해서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륜과 학식을 겸비한 안병영 부총리께서 지난해 취임하신 이래 추진하신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최근에 어느 정도의 성과에 기반한 국

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부총리와 이 자리에 계신 직속기관·산하단체 기관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교육강국의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위원 여러분들의 인사와 함께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부터 말씀드리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황우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러면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구논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대전 서구출의 열린우리당 구논회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백원우 위원** 경기 시흥갑의 백원우입니다. 열린우리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복기왕 위원** 반갑습니다. 충남 아산의 복기왕입니다.

(박수)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유기홍입니다.

공교육을 살리는 일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황우여** 우리 국회 관행이 장내에서의 박수나 환호는 속기록에 기재될 경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환영하여 주시는 것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인영 위원** 서울 구로갑의 이인영 위원입니다.

○**조배숙 위원** 열린우리당 익산출의 조배숙 위

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병문 위원** 광주 남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지병문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열린우리당 위원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한나라당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문 위원님부터……

○**곽성문 위원** 대구 중·남구 출신 곽성문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준비가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權哲賢 委員**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산 사상의 권철현 위원입니다.

저는 여당을 1년 했는데 아직도 여당인 것 같아서, 이번에 진짜 야당이 될지 한번 보여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입니다.

유·초·중·고 교육 현장에 있다가 금번에 한나라당에 입성한 김영숙입니다.

○**이군현 위원**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이군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주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진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무소속이신 우리가 잘 아는 정몽준 위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정몽준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도 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소속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천병호 전문위원입니다.

구기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진선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종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은규 입법조사관입니다.

오봉근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이광전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 1. 간사선임의견

(10시36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견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오신 열린우리당 소속 조배숙 위원님과 한나라당 소속 이주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간사(조배숙·이주호)인사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두 분 간사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간사로 선임된 조배숙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간사 직무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이주호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직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맡겨 주신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상임위가 원활히 운영되고 우리 교육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2. 현황보고

###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 나. 대한민국학술원

#### 다. 국사편찬위원회

#### 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마. 국제교육진흥원

#### 바. 국립특수교육원

(10시38분)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와 5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받으신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고하시는 기관장들께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영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부 간부와 직속기관장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주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오늘 제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인적자원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우리 부는 '교육혁신을 통한 지식 문화 선진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초·중등 및 고등 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각 부문에 걸쳐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국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가 설정한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교육 내실화

로 학교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고, 지·덕·체를 고루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떠한 교육 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과 함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소외됨이 없이 능력 개발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특성화·자율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겠습니다. 과감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 교육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교육훈련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의 정보화와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Learning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WTO DDA,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2만 불 시대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혁신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부와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율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교육인적자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부 간부와 직속기관장, 산하단체장 그리고 국립대학교 병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범석 차관입니다.

정기연 차관보입니다.

김영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정봉근 인적자원총괄국장입니다.

정종수 인적자원개발국장입니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입니다.

박경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입니다.

정영선 공보관입니다.

이종서 감사관입니다.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입니다.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입니다.

하연섭 정책보좌관입니다.

우승구 비서실장입니다.

황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이경복 교육현장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학술원 사무국장입니다.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구관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오성삼 국제교육진흥원 원장이십니다.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이십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이십니다.

김여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십니다.

박관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십니다.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이기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십니다.

김영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이십니다.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전수한 경북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황태주 전남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박돈규 부산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양두현 전북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이준규 충남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김승택 충북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박철수 경상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장범석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이십니다.

김근우 강원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홍강의 제주대학교병원장이십니다.

장영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십니다.

(산하단체장 및 국립대학교병원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그사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제가 상임위가 열리는지 모르고 있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정봉주 위원님, 아까 안 하셨습니다습니까?

○정봉주 위원 없어서 못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우리당 노원갑 출신 정봉주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개혁에 좀 열심히 나서 볼 생각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산하기관장과 국립대학교병원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고가 없으시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

다.

김영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 김영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2004년도 정부입법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조직은 1차관보와 2실, 4국, 4 심의관, 3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 수는 5개 기관이고, 국립학교 103, 16개 시·도교육청, 산하단체는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은 혁신과 교육예산, 여성교육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정책실은 주로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은 주로 대학교육 업무와 인적자원 정책, 평생직업 교육정책 업무들을 맡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육정보화국은 교육정보화와 국제교육협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능직을 포함해서 46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각급학교 현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총 포함해서 1만 9000여 개의 학교수와 학생은 1193만 명 정도, 교원 수는 47만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교육부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규모는 26조 384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2조, 거의 예산 대부분이 초·중등교육에 내려가는 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4조에 채 미치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5%는 인건비 등 주로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소관법률은 46개 법률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교육혁신을 통한 지식문화 선진국을 주요 비전으로 하고 교육의 공공성 제고

와 교육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과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학교자치체제의 구축을 통한 자율운영체제 구현, 분권과 혁신, 참여 기반의 현장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교육혁신 기반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 회복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첫째, 사교육비의 경감대책 추진에 있어서 금년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단기·중기·장기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4월 1일부터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고 방과 후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운영을 활성화했습니다.

아울러 중기대책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교원 확보, 평준화제도 보완, 대입제도 개선 등 금년 8월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4월에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추진을 위해서 공교육 내실화지원단, T/F팀 구성, 상설장학반 운영, 교육현장 중심 모니터링제도의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EBS 수능강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방과 후 학교 개념 도입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입니다.

모든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최소한 받아야 될 교육을 기본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2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표집을 3%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한 것과 2002년도 평가한 것을 비교할 때 읽기와 기초수학 영역은 부진학생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쓰기 영역은 부진학생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있어서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 교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력과 탐구력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수준별 수업 모형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를 금년 9월부터 희망하는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체제 도입에 있어서 지식정보의 급증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절성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시 개정체제에서 수시 개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서 제도 개선에 있어서 국정도서를 최소화하고 검·인정 도서를 확대하며 검정제도 및 교과서 수정·보완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평생체육으로서의 학교체육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엘리트 선수 육성에서 생활체육·평생체육으로 학교체육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풍토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 운동선수들도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경기대회도 출전 횟수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체육 시설 확충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체육 시설 실태조사와 표준모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을 2007년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학교에 1개의 현대화된 실험실 확보 추진을 목표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교실 500개와 과학동아리 500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뛰어난 학생들의 영재성 계발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회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우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영재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과 신설을 2007년까지 6000개 학교를 목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259개교의 리모델링 또는 신설을 완료했고 금년 중에는 1200개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여건을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학교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 보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교평준화는 7개 특별·광역시와 5개 도의 23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제도의 공과 및 보완방안에 대한 논쟁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간의 적절한 조화 실현을 위하여 제도의 역동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하고 높은 교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성과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체험·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 산재해 있는 인성·창의성 교육 관련 우수 자료를 교수학습센터를 통해서 통합·지원할 계획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학교 주5일 수업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금년에는 전체 학교의 10%에 해당하는 1023개교를 대상으로 월 1회 우선 시범 운영하고 내년 월 1회 실시하고 2006년 이후 계획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원사기·전문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원양성·선발제도 및 연수체제 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원양성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자격 취득 요건 정비,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개선 또 교원 임용시험에서 교수·학습 지도능력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연수체제 개선과 연수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초등교원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감 추천 교대 특별편입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실시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대에 특별전형으로 신·편입학시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당해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의 신·편입학 정원을 임용 대 양성인원 비율을 1.2배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교원승진·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현행 교장임용제는 승진임용제와 초빙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능력 있는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초빙제와 공모제 등 교장임용제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단체와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있어서 현행 교원근무성적 평정은 주로 승진 등 인사관리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원들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평가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교직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원복지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우수 인재에 대한 교직유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 수준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있어서 법률의 실효성 담보가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보수 우대 등 복지제도 개선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농어촌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 수업부담 경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대입니다.

교원 수업시수 경감 노력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교원노조에서 최대 수업시수를 법제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설정된 수업시수를 초과하는 교원의 경우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요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안을 검토해 볼 때 교원노조(안)으로 설정할 때 약 7만 6000명 정도의 추가 증원이 소요가 되고 초등교원의 경우는 소요인력 6만 1000명에 비해서 실질적인 양성인력은 55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고충도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교원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교원정원 확보율이 법정기준 대비해서 89.2%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행정자치부에 법정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2002년도와 2003년 그 기간 중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최저 교육수준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아교육법이 제정·통과되었습니다만 그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 아래 부분을 보시면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부처 간에 앞으로 많은 조정과 협의의 거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의 만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한 단계적 확대입니다.

모든 만 5세아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출발점에 있어서 평등성을 구현하는 취지하에서 현재 저소득층 13만 1000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일반 운영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업료와 급식비 지원도 현재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12만 4000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생 PC 지원과 인터넷 통신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용자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학급 신설과 증설 또 특수학교 노후·부족교실 개·증축 지원과 또한 장애유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병·허약아를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서 특수교육 보조원과 장애인 편의시설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182개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내 장애인 교육복지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격년제로 그 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6개 지역과 부산 2개 지역인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지역을 내년에 15개 지역 또 2008년까지는 40개 지역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을 2002년 11월에 이미 방안을 확충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금년 3월에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3%에 머물고 있는 특별전형을 4%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농어촌 지역 우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 확대를 권장하고 있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 또는 사택을 지원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대안교육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24개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각종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한 학교 내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령에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도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문제, 전문상담교사 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 의사가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수천 명의 학생을 단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기관에서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사 내의 환경위생 관리기준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새집증후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양 중심의 확대 정책에서 질 중심의 내실화 정책으로 정책의 기초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은 가능한 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학부모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기본적으로는 직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수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금년 1월 중에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추진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 수준의 대학 교육·연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6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성과를 토대로 후속 기본계획을 만들 생각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초학문 인프라 구축, 기초학문 연구력 증진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심 대학 집중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BK21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육성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7년간의 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후속 BK21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BK21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제도개선을 통한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체제 전환을 했고 특히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등의 연구력 향상 및 연구 성과를 증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CI 논문의 국가 순위와 서울대 순위가 97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앞당겨졌다는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Post-BK21 사업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연구역량 평가를 통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화에 따른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또 5년 평가주기제를 도입한다든지, 평가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일반인에게 평가 결과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유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구조 개혁 추진입니다.

인력수급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계획으로서는 2009년까지 입학정원 9만 4000명 정도, 현재 입학정원의 15% 정도는 감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계획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31명에서 2009년에는 21명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립대학의 연합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특성화 유도, 사립대학 인수·합병 및 퇴출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특히 사립법인의 경우에는 인수 또는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 출연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입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학부 4년간 플러스 대학원 4년간 체제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미 2003년부터 전환해서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법부와 현재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협의하고 토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 자율화 추진에 있어서 학사, 인사, 사학·법인 분야 등에서의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화 로드 맵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241개 지방대학 중에서 112개 대학이 이미 선정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발표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중 현장 실사를 통해서 선정된 111개 선정사업단을 점검하고, 사업 연도 후에 연차평가를 실시해서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2008년도 목표로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을 70% 이상 달성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방대학이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아울러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학생감축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 산업분야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있어 선정된 사업단은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의 전략산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도 도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선정하는 400억 원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에 필요한 학교기업제도를 금년 3월 중에 도입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입니다.

첫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인력 개발정책 추진에 있어서 2만 불 시대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혁신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장과 사회 통합의 균형 관점에서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추진도 4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인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내년도 시행계획을 18개 부처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시행계획을 11월 중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난 산업별·직업별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13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 위주의 교육통계정보를 교육과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 통계정보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중심의 양적 정보 서비스 체제에서 자료 분석 및 예측 서비스 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43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적자원 영향평가제도 아울러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투자가 인적자원의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평가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주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기업 등 민간 주도 인적자원 개발로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인증제는 기업의 모범적 인적자원 개발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금년 중에 정책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과 민간이 함께 하는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민관합동 위원회로 개편하고, HRD 관련예산 사전조정제도 등의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도 대학,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체도 부산, 광주, 충북 등 3개 시범지역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산업 수요에 맞도록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실업계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학 진학률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특성화고를 확대한다든지 통합형 고등학교를 확대한다든지 실업계고 학과를 첨단학과로 지속적으로 개편한다든지 실업계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교 명칭을 자율화하는 문제까지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기 위한 국가 직무능력표준 제도를 도입하고 금년 중에 실내건축에 대해서 표준시안 1종을 개발해서 시범 적용하고 산업부문별 교육과정과 훈련과정, 자격검정 기준, 직업정보의 연계지도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대학 평가를 통해서 영역별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3년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체와의 특약학과 운영 등 주문식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전문대학 학생에 대한 근로장학제도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서 평생학습이 앞으로 강조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해 나가고 학점은행제 운영도 좀더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시설과 인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주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인 대상 주말 대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용해서 일반인에게 제빵 등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성인인구 중에서 초등학교 학력이 없는 성인 인구가 242만 명에 이릅니다. 초등학교 학력 인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 시스템도 구축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에 대한 재취업 교육 등의 교육 부문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교육 정보화 지원입니다.

EBS 수능강의에 대한 후속 보완대책의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EBS 수능강의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연구를 통해 모색하고 민·관 합동 시스템 전문가 TF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수학습센터와 사이버 가정학습의 통합을 통해서 자율·보충 학습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서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중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시범 교육청을 선정·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e-Learning 지원체제에 대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회계 등 일반행정영역 업무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응용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보장 및 추가 개발, NEIS 보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NEIS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NEIS 운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정보화 활성화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국제화 촉진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입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금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만

20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5만 명 유치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WTO DDA, FTA 협상을 통한 교육 국제화 촉진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제출한 제1차 양허안을 토대로 교육 서비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제출한 양허안 내용을 보시면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일부에 있어서 현재 국내법상 허용되어 있는 수준에서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 교육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 강화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평가 관리, 재정, 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 확대를 목표로 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문제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협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을 위해서 저희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 평가·감사,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권화·자율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 지속적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이 마련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통교부금의 교부 방식을 단순하게 단일화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경상교부금,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등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경상교부금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를 검토하

고 있고 또 시·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내립니다마는, 시·도를 너무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편성지침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기능과 조직을 두 차례에 걸쳐 실질적인 인적자원 총괄부처로 기능을 조정했고 인사관리정보시스템도 많이 바꿨습니다. 가능한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제도를 많이 확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참여 확대 및 주민 대표성 제고를 통해서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이념이 구현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를 강화시킨 부분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일원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학 책무성 제고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황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사학비리에 대한 견제나 예방 장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쟁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 중심의 사후 감사로는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립학교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명선거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7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7월 19일, 대전교육감은 12월 중이어서 금년에 남은 교육감 선거가 3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엄정하게 치

를 수 있도록 특별 연찬회, 서한문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부총리 서한문도 보내고 차관이 현지에 방문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교육부 내에는 공명선거대책팀을 구성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공명선거점검반을 통해서 불법선거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금년 4월부터 도입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범계 지역가산점 등 위헌판결 관련 입법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헌법재판소가 사범계 지역가산점과 복수 부전공 가산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의를 해서 위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현 재학생들은 보호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임용시험이 초등의 경우에는 10월, 중등의 경우에는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현 재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발추 발생 경위 및 조치 내용입니다.

이것은 90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사범대학의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지만 실제 발령을 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되겠습니다.

진행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92년부터 임용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령이 입법되었습니다.

관련 쟁점을 보시면 중등교원 특별임용은 사범대 측에서 위헌소지 등을 제기하며 계속 반대하고 있고 미발추 일부는 미발추특별법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발령 교사지만 그 당시에 군에 입대 중이어서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저희들은 통상 군미추라고 합니다마는—오히려 미발추에 비해서 국가의 병역의무를 다하다 발령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도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출제위원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또 전국단위 시물레이션 실시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해 실제 수능시험 때 반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8학년도 이후의 중장기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해서 내신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선발 방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지금 교육혁신위원회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응방안을 보시면 학교내신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과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가능한 완화시키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은 늦어도 금년 8월 말까지는 기본방침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대 6년제 추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20일 한의사협회와 약사협회 회장단 간에 약대 6년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6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공문으로 6년제로 늘리는 약대학제 연장 요청을 저희들이 접수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필요에 따라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이 원활하도록 국내 교육관계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이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설립주체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 한정했고, 설립기준은 다소 완화했습니다. 학력인정은 1주일에 1시간씩 한국어, 한국사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송금은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정원 및 내·외국인 비율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설립 승인 시에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정부입법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초·중등에 투자되고 대학에 대한 투자는 약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한 법이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이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를 좀 단순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은 앞부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부분에 있어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학원 및 교습소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은 교육훈련과 자격, 산업현장의 연계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위험결정이 난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과거에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 규정에 있어서 사전구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 중에 극장이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경우는 제외하는 부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학의 민주성 확보는 앞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자율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초·중등교육법 부분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도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와 병·허약을 새로운 장애 범주에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추진 입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철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황인철 학술원 사무국장입니다.

학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원의 설립목적 및 기능을 보고드리면 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부문 및 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기능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학술연구와 그 지원 그리고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학술원상 수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면 1952년 문화보호법 제정에 의해서 1954년 학술원 회원 50명을 선출하고 54년 7월 학술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988년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을 통해서 회원정원이 150명이 되었고 2002년에는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을 통해서 명예회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구 및 회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원 기구는 전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있고, 회장 및 부회장이 계시고 그다음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래서 11개 분과가 있습니다.

임원은 15명으로 회장 및 부회장 그다음 인문·사회과학부 회장, 자연과학부 회장, 각 분과의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별 전공 및 회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50명 정원에 134명이 회원으로 계십니다.

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분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20년 이상 경력이 되고 또는 학술연구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회원의 자격이 있고, 회원의 선출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 추천을 받아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회원이 되시면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원들에 대한 예우는 학술연구

비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매월 회원수당으로 120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회원은 저희들이 노벨상 추천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2년도에 법 개정을 하고 2003년도에 처음 선임한 제도입니다. 현재 정원은 20명입니다만 다섯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의 명예회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학술원사무국 직제는 대한민국학술원법 및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총무과와 학술진흥과 2개 과가 있고, 주요기능은 학술원의 제반 행정 업무를 지원해 드리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공무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술원 시설은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가 2000평쯤 되고 건물은 1500평 되는데 예술원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500평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학술원의 2004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금액은 42억 6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8억 7900만 원, 기본경비 6억 4000만 원, 학술진흥 24억 5700만 원, 청사시설 보수 및 개원50주년기념 행사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술원은 매년 하는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금년도에는 개원50주년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 사업을 보고드리면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해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신 분을 시상함으로써 학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인문·사회과학 부문 및 자연과학 부문에 각 3인씩 여섯 분을 선정해서 9월에 상장 및 메달, 1인당 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문별심사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해서 세 분이 심사로 통과했습니다. 국양 교수 및 이후철, 조성호 교수님이 해당되시겠습니다. 앞으로 7월 16일 부회 및 총회에서 확정을 하고 난 뒤 9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우여 예, 말씀하시지요.

○이군현 위원 학술에 현저한 공이 있는 분들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시상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이 업무를 자세하게 다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하시

면 좋겠고 앞으로 이어지는 직속기관들도 5분이면 5분, 기관별로 간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미 자료가 다 배포되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요점만 간결하게 요령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황인철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원50주년을 맞아 저희들이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기념물 및 도서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원 학술연구 지원 차원에서 매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제당 700만 원 정도 지급해 드려 가지고 연구결과를 논문집으로 발간해서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학술교류 추진입니다.

국제학술교류를 위해서 국제학술기구 8개 기구에 가입되어 있고 9개국 12개 외국학술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간행물을 발간해서 국내·외 학술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학술활동 활성화 및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초학문 분야 우수 학술도서 선정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술원에 위탁을 했던 사업으로서 매년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기초과학 4개 분야의 우수 도서를 400종 정도 선정해서 대학 및 연구소, 공공도서관 등 400여 기관에 우수 책자를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서 신청을 접수해 보니까 3417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 8월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9월 이면 확정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법률 제1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



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발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혁은 1946년 3월 23일 경북궁 집경당에서 국사관으로 발족한 이래 87년 과천에 있는 현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근거법은 87년에 마련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보면 1부 4실 1과입니다. 위원장과 자문기관으로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원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정원을 보면 연구직 42명을 포함해서 79명입니다. 이밖에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9명의 사료연구위원이 있고, 사업에 따라 용역에 참여하는 일용직 15명 내외, 일반용역직이 많을 때는 한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장자료 및 해외수집자료 현황을 보면 소장자료는 27만 점이 있습니다. 해외수집자료는 6월 30일 현재 252만 장 외에 2000여 롤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수집되었습니다.

2004년 예산현황을 보면 157억여 원인데 인건비 26%로 40억 원, 기본사업비가 14%로 22억 원, 주요사업비는 27%로 42억 원, 사료관 증축 33%로 52억 원에 해당합니다.

다음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정리 개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운영 체제를 확립했는데 실장 순환보직제와 다면평가제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정 정비를 통한 성과중심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중점 추진과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본래 사업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사업과 사료의 연구·편찬·간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거론한 주요업무는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사료의 연구·편찬·간행 등으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은 전국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사료의 현황 파악과 수집·보존하는 것이고 또 해외사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범국가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DB화하고 또 연구자와 국민들이 공동 활용토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사료의 경우 미국 국립공문서관에 국사편찬위원회 전용작업부스를 설치했고 일본에서도 한국 관계 자료의 소장 현황을 파악해서 체계적

으로 수집·보존하고 있습니다.

수집대상 자료 가운데 미국의 경우 저희 판단 으로서는 55%, 일본의 경우는 60% 를 수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유럽에 흩어져 있으면서 유실되고 있는 한국사 자료의 조사·수집은 아직 출발단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의 연구·편찬·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본사업 예산으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주요사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북한 교육·문화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사교류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남북공동연구 및 공동번역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와 관련해서 북한 관련 42책이 간행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의 정보화 사업으로서도 한국역사정보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해서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각, 정신문화연구원 등이 합쳐서 이룩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2개 기관으로 확대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역사 관련 및 각 대학도서관 등과 메타데이터 연계를 통한 통합포탈서비스 체제의 완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족사의 체계적 정립과 확충을 위해서 지금까지 비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대한민국의정부사 및 재외동포사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연구·편찬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정부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체계적으로 임하지 못했습니다.

재외동포사는 해외 거주 700만 한민족의 정체성 고취와 관련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밖에 국가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국경(영토), 민족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가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료관 증축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작년에 설계를 했고 올해부터 지하 3층 지상 3층 총 3000여 평에 해당하는 사료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는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사업과는 달리 국편의 기본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2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상의 제약으로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방사료조사위원 500여 명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사 연구·편찬·간행 등이 있는데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는 102종 1226책을 간행했습니다. 가령 한 종류라 할 적에 승정원일기 1종류는 141책, 최근에 나온 신편한국사 역시 1종류입니다마는 이것은 52권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9권 30책을 저희들이 간행하고자 합니다. 또 올해부터 시작한 것 가운데에는 한국문화사 약 60책을 계산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국사 학술회의 및 연구지원이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국편의 주요사업인 사료의 탈초·번역 예산 관련입니다.

현재까지는 약 1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료의 탈초·번역을 제대로 진행하자면 약 7억 3600여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승정원일기를 정보화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을 간행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현재대로 한다면 상당한 기간, 앞으로 12년간 해야만 저희들이 필요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을 간행할 수 있는데 학계의 요구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1~2년 내에 다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변사등록 국역의 문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비견되는 조선시대 4대 사료의 하나인 비변사등록을 국역 간행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273책 중 103책이 번역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매년 43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르면 앞으로 이것을 완간하기 위해서는 30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10년 내에 이 사업을 종료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각사등록 같은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중·후기 각 관청의 문서인 등록류를 탈초해서 정리 간행하고 인터넷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142책 중 92책을 간행했습니다. 현재 매년 4500만 원 예산에 따르면 완간까지는 앞으로 20년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빨리 간

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운영 문제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1년 3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부로부터 5개 분야 국가 지식종합정보센터 가운데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었지만 예산과 인력의 부족 그리고 법적 장치의 부재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인력 부족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종합정보센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는 시스템 관리자 1명이 3~4개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국편의 경우는 한 사람이 8~9개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행자부에 종합정보센터 운영요원 5명의 증원 요청을 했지만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운영예산 지원 부족입니다.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종합정보센터 운영예산 요구 시에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정보자원관리기금에 대한 일반예산 지원 불허 방침 및 기금운용법 간의 상위로 인해서 운영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관련 법제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것을 국편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법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들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관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징계재심위원장 구관서 교원징계재심위원장입니다.

저희 기관의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기관의 목적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제도를 운영해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각급학교 교원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다거나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저희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국·공·사립학교의 모든 교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를 저희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조건과 신상문제 등에 대해서 고충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교육공무원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사건이라든지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장학관, 교육연구원 및 교장의 고충 사건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저희 업무로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저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행정소송을 저희들이 피고의 입장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기관의 연혁은 1991년 5월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기구와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는 위원회 밑에 심사과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 경영자, 교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들이 재심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의 임명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정·현원은 22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인건비 11억 400만 원, 청사 보수를 위한 주요사업비 14억 등을 합쳐 29억 8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기관은 삼청동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약 4800평, 건물 연면적이 약 3800평입니다. 그 중 약 2800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빌려 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심청구사건입니다.

1991년도에 저희 기관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2520건의 재심청구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심청구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인용—다시 말하면 처분의 취소라든가 변경을 해 주는—조치가 1061건으로 인용률은 약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교원의 재임용 탈락사건은 여태껏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 결정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 6월 17일 개최된 제230차 재심회의부터 적극적인 교원의 권리 구제라는 차원에서 재임용 탈락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충심사청구사건은 94년도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151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인용과 부분인용이 26건으로 부분 인용률은 약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은 개청 이래 현재까지 195건을 접수했고 그 중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 약 95건으로 78.5%의 승소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삼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진흥원장 오성삼 국제교육진흥원장입니다.

국제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 교육과 국제교육 교류·협력 그리고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 연

수, 국비 유학생 지도·관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962년도에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 지도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부설로 출발해서 2001년도부터 교육부 직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으로는 원장 및 4개 부와 1개 기숙사 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의 정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의 예산은 189억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부지 2700평과 건물 5000평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재외동포 자녀들의 국내초청교육을 장·단기 과정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은 28주 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단기 교육과정은 전·후 학기 12주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방학을 이용해서 계절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개 과정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교육 관계자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자녀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육 관계자들, 현지인들을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입니다. 중국인 동포 교육 관계자와 영어권 동포 교육 관계자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 교육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 국제교육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현지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미주, 유럽, 남미, 러시아 지역의 1000명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해서 국제교육진흥원 내에 인터넷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KOSNET이라고 명명지어진 프로그램에 현재 82개 국가에서 3만 6000명이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동포용 교재 보급 및 교육정보 제공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해서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를 발간하고 현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 교사용 지도서 2종과 한국어 역사 4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Education in Korea)’이라고 하는 영문 책자를 매년 12월에 6000부를 발간해서 130개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국학생 연계 교육과 일요지구촌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해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내 학생들의 숫자가 약 1800명입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귀국한 이후에 그들이 해당 국가에서 습득한 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신장할 수 있도록 귀국학생 캠프를 방학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국학생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급에서 귀국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매 일요일마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국제교육진흥원에 모아서 각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 가을 학기부터는 외국인 자녀들과 해외에서 귀국한 우리 내국인 자녀들을 언어권별로 반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모집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교육 교류·협력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국비 유학생 선발·관리를 저희 국제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명씩을 선발해서 일본의 공과대학 학부에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업료와 생활비 등 경비 일체를 전부 다 부담하는데 한·일 양국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지급하는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유학생 선발·관리는 해마다 40명 내외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박사학위 과정 그리고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전문요원 과정입니다.

다음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정부 초청으로 선발하면 저희 국제교육진흥원 기숙사에서 기숙하면서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우수 대학에 유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청 인원은 한 해에 70명 정도로 한 달에 72만 원의 생활비와 연구비, 정착지원금, 등록금, 어학연수비, 왕복 항공료를 부담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외국 정부 초청 장학생을 선발해서 각국에 파견하는 일들을 국제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데 17개 국가 170명을—2003년도에 172명을—추천해서 현재 해당 국가에서 학사·석사·박사 혹은 연구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권 미래 지도자 초청연수 다변화를 목적으로 1170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일 학생 교류를 위해서 중·고생, 대학생, 교원들의 교류가 9박 10일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처음으로 아시아권 대학생 교류를 실시하는데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어제 입학식을 마쳤습니다.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대학생 40명을 이번에 처음으로 선발을 해서 9박 10일 동안 우리 대학 방문과 유적지 답사, 산업현장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6개월간 연수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33명이 있었고 현재 40명의 학생들이 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에 해당되는 일어, 불어, 독어, 중국어 등의 교과 담당교사들을 문화협정에 의해서 단기 혹은 장기 연수를 시키고 있고 전공교과별로 과학 및 실업계 교사들을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의 인원은 290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 교육공무원들에 관한 직무연수를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들에 대한 특별 해외연수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의 계획하에 유학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개 언어로 되어 있는 국내 유학자료를 발송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내 대학들에 대한 소상한 자료와 지원절차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 유학 박람회 지원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정책 전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를 위해서 현재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을 비롯한 4년제 대학들의 입학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유학을 선호하는 해외의 주요 국가와 도시에 나가서 유학생 유치사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6개국 11개 도시에서 해외 유학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장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의 기본 방향……

○**安商守 委員** 읽어 보니까 대강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5분 정도로 줄여서 합시다. 점심시간도 이미 지난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우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분과 특별한 현황이 있으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용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고 많은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특수교육 재학생이 5만 5374명입니다. 저희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 및 전 국민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지원하는 특수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연혁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구성은 총무과, 기획연구과, 연수과, 정보운영과의 4과 체제로 운

영되고 있는데 이 중 정보운영과는 직제 미개정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은 2쪽을 참고하시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특수교육 연구, 특수교육 연수,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 연구의 추진방향은 특수교육 정책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사회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체제 구축방안 연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연구·개발, 특수교육 정보 교환 및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식을 특수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수교육 실태조사 2종, 특수교육 기초연구 3종, 특수교육 학습자료 개발 3종, 특수교육 학술대회 4회, 특수교육 홍보자료 3종, 특수교육 국제협력 4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 11쪽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황우여** 그것은 생략하시고 특수교육 연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용욱** 두 번째, 특수교육 연수사업은 주로 수요조사 결과 및 연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제 중심의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급) 교원의 전문성 및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동포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용은 12쪽부터 1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입니다.

특수교육 정보화의 추진방향은 열린 특수교육 및 평생학습 정보지원체제 구축, 원격 특수교육 방송연수,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연수인데 일반인들의 장애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반인, 일반교사, 특수학급교사에 대한 사이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특수학교의 학문 연혁이 상당

히 짧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수유 학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수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운영과를 정식 과로 증설하고 과장 직급을 다른 직속기관의 직제에 걸맞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가 3개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협의하에 1998년 4월 30일 본원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직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독립된 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총무과, 기획연구과, 연수과의 3과 체제에서 총무과, 기획연구과, 연수과, 정보운영과의 4과 체제로 직제개편이 절실합니다.

또 과장 직급이 타 소속기관 또는 부처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업무협의 및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특수교육 중추기관으로서의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서 타 기관의 직제 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오후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황우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국회법 제60조에는 위원님들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15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일괄질의하는 경우에는 15분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20분을 드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지병문입니다.

17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정책을 논의하는 중심에 서야 된다는 국민의 기대도 있고 우리들의 다짐도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면,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밖에 많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아마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상임위 활동을 자주 해야 되고 자꾸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아온 바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일이 계속되면 아마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육부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질의에 답변하실 고위 공무원들만 참석을 하시고 일반 분들은 교육부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학 개혁에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상임위 활동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정상화 특히 중등학교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지난 수십 년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매달리고 매달렸던 것이 입시방법을 바꾸는 소위 대학입학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이냐에 얽매어 있어서 해결이 안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을 바꾸지 않고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대학을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 것은 10년도 더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학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대학의 구성원이든 국민이든 학생이든 아무도 긍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대학 개혁을 강조했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학 개혁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나 하면, 대학 개혁의 핵심이 교육과 연구를 제대로 하는 대학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된 대학 개혁은 사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연구의 성과를 내는 교수가 대우를 받고 교육을 잘한 교수가 대우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대학 개혁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보직교수의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논의가 핵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학 구조조정을 한 다면서 교육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내면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고 몇십 억의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능 점수로 줄을 서게 해서 학생을 뽑는 우리의 입시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무슨 과목은 몇 점 더 주고 무슨 과목은 몇 점 더 주고 이런 식의 방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어떻게 바꾸어 가지고 다양하게 해 보겠다는 안을 내면 교육부는 그에 대해서 몇십 억의 인센티브를 또 줍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생들을 졸업 시켰어도 취직을 못 시키는 학과는 없애고 학생이 안 가는 대학은 문 닫게 해서 결국 경쟁력 있는 학과와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시장경제에서 얘기하는 것과 맞는, 지금 상황에서 요구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 교육부 나름대로 인센티브로 지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두었느냐? 국립대학의 경우를 예를 들면 보직 숫자를 줄여라 이것이 구조조정이다.....

그러면 지금 국립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거에는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두면 그 밑에 부처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처장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학위원, 교학상임위원들이 이름만 바뀌서 과거의 부처장이란 이름으로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면서 대학도 그것이 구조조

정이라고 교육부에 얘기를 하고, 교육부는 그것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이 현실의 경우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학을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학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립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최소한 국립대학 수준으로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 소위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교육혁신위를 만들고 또 교육부도 나름대로 대학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대학의 발전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님께 드리고 싶은 질의는 아침에 중앙일보 월례 포럼을 보니까 부총리님께서 “국립대, 공동학위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혁신위원회 보고서에 있는 공동학위제는 부총리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부총리님께서 “모든 국립대학을 묶어서 하나의 공동학위제로 가면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서울대 폐지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혁신위원회는 국립대학 간의 협약에 의해서 전공별로 학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공동학위제를 준다 그 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육혁신위에서 얘기하는 공동학위제의 내용하고 부총리님께서 중앙일보 포럼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 얘기는 곧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혁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최소한 교육혁신위하고 교육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데로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을 보면 소위 교육혁신위하고 교육부가 대학 개혁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손발이 안 맞지 않느냐, 특히 개혁을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공동의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교육부도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보는

데요. 그야말로 최근 대학의 한 10분의 1 정도와 중·고등학교도 비리와 분규에 휩싸여서 강의가 제대로 안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아마 교육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소위 사립학교 재단 운영과 학교 운영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단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언론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간 지난 10년 동안 대학만 따져도 한 10% 정도가 이런 분규에 휩싸여 있고 사립학교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라고 언론이나 국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져야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교육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국민도 기대하고 있고 또 외부의 언론이나 저희 국회의원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그럴까, 그동안의 진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지병문 위원** 저는 일괄해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哲賢 委員**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영 부총리를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꼭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같은 데에서만 서로 주고받고 하지 말고, 이제 노 대통령께서도 임기를 함께 하는 교육부장관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부총리 재임 시에 정말 획기적인 교육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국회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특정 주제를 가지고 부총리와 저희들이 한번 토론도 할 수 있고, 끝장을 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6대 때 교육부장관이 7명이 바뀌었던가요? 한



번 회의하고 그다음에 가면 또 장관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한 장관에게 두 번 같은 질의·대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 전 지병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16대 때 교육위원을 하신 분이 세 사람밖에 없고 전부 처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립학교법 같은 것이 왜 그때 개정되지 못 했던가 이런 것에 대해 교육부에 물어볼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일도 있을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4년을 한번 죽 리뷰하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서로 공통된 경험을 빨리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께서 한번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급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11월에 부산에서 세계 21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개최지가 겨우 금년 4월 말에야 부산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필요한 건물을 짓고 준비하는 것이 초 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회의 장소 건립 문제입니다. 정부와 부산시 간에 합의가 되어서 해운대에 가시면 조선비치호텔이 있는 동백섬 뒤에 부경대학교 소유의 수산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시키고 거기에다 정상회의장 건립을 하도록 합의된 모양입니다.

APEC 전체 관련 사업을 보면 총 13개 사업에 2598억입니다. 국비 729억, 부산시비 1729억, 민자 140억인데 그 중 정상회의장 건립비용은 369억인데, 국비 110억, 시비 259억으로 바로 이 국비 110억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되지 않아서 이번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바로 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링(ceiling) 범위에 관계 없이 기획예산처로 요구를 하시면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국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알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예산편성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가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지 못해서 과학기술에서 뒤져서 세계와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시절의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육부의 담당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초·중등 학교의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교구 확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과학실험실을 얼마만큼 현대화시키면서 어떤 종류의 과학교구를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과학기술 입국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배려와 과학교구 선정에 대한 깊은 생각이 계시는지, 지금 바로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교구 확충이라는 부분에 있어 어떤 과학교구를 선택해서 초·중등학교에 배정해서 어떤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침으로써 과학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바로 대답하기가 뭐하시면 따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권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대답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 중심의 과학실험실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학교 현장에서 최근 굉장히 열띠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ICT 교육정보화 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것과 과학실험실의 현대화를 연결시키는 노력이 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험기기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실험기기를 한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보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을 e-Learning과 연결시키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것은 큰돈이 안 들면서 과학교육을 현대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꽤 좋은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초·중등학교의 과학교실을 현

대화시키고 어떤 과학 교구와 교재를 도입해서 어떤 부분의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22페이지를 보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여금인가를 하다가 말썽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안에 우수 교원이 있고 비우수 교원이 있게 됩니까? 어떤 교원은 우수 교원이고 어떤 교원은 열등 교원이고 이렇게 구분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것은 오히려 이군현 위원님이 답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총에서 주로 주장해 오신 것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우수교원확보법은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선연적·규범적으로 입장만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돕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이 양반들의 교육열이라든가 연구열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제도도 뒷받침되어서 이것이 함께 제대로 확충되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哲賢 委員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여쭙봤던 것인데 이 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교단의 갈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25페이지에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및 공교육화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유아교육법을 제정했습니다만, 이렇게 법만 제정해 놓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연적 의미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이외에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이 전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나 종일반 담당자들에게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연 2000억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수월하지 못합니다.

○權哲賢 委員 이것이 시행령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수월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시행령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질 수는 없더라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쯤 되면 몇 %의 지원이 되도록 한다, 이번에는 5% 10%, 그 5% 10%만 하더라도 돈이 많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시행령에 이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7페이지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서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기 병 치료를 하고 있는 장기환아들, 백혈병이나 소아암에 걸려서 몇 년씩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것 역시 이번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국정감사 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투병하면서 상급학년으로 진학도 하지 못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퇴학을 당하고 이런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장기 환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權哲賢 委員 그다음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에서 대학교육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이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서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 버려야 돼요.

대학교 1학년 들어 와서 1학년 지나고 군대 가고 2학년 지나 군에 가고, 군에 갔다 오고 나면 머리가 다 썩어버리고 늙은 학생이 되어 버리고,

가기 전까지는 매일 술만 먹고 미팅이나 하다가 결국은…… 군 문제다 싶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가서 2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특별한 메리트를 준다든지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군대 걱정 없이 바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대학 4년을 2년 동안 졸업하게 만든다든지 한국의 국립대학 총장부터 전부 외국인으로 바꾼다든지 뭔가 혁신적인 계획이 들어 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열거된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강대국,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강대국, 문화 혁신을 통한 문화 강대국, 3대 강대국론을 지난 번 16대 때도 자세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읽어 봐 주시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교수로 계실 때에 늘 말하시던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고맙습니다.

○權哲賢 委員 47페이지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명칭을 자율화, 학생 총정원제 모집, 일반계고와 동시 선발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상고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까? 상업 고등학교가 지금 사회에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두 가지 면일 겁니다. 본질적인 차원하고 실용적인 차원 그런 것일 텐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權哲賢 委員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업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쓰니까 부산에서도 부산상고가 부산제일고등학교, 경남상고가 경상고등학교로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상고를 다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요를 무시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왜 그때 그렇게 일률적으로 전부 없애 버려 가지고 상고 졸업생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을 빚는 이럴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실 이 점은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우선 상고라고

해서는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자꾸만 매력적인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개괄적으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다음번에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도 와 계시는데 그냥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만열 위원장님과 부총리 간에 대화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주시지요.

○權哲賢 委員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도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일이 무엇 중심인가 하면 자료정리 중심입니다. 자료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근대사 중심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또 최근 중국 정부가 고구려가 중국의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변방국가의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논리적으로 아니다 하고 일관성 있게 짚 역사적인 고전들을 갖다 대면서 공박하지 못한다면 국사편찬위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을 죽 봤습니다마는 한국 고대사 하시는 분이 두 분 있는데 저도 아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한국 상고사에 대한 것을 중국 측의 각종 원전을 제대로 다 읽어내려 가면서 해석하고 정리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정리만 할 일이 아니고 고구려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나라인지, 이것이 기자조선 이후에 마한으로, 마한이 한나라로, 한나라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맥이 하나인 나라인지 아니면 어느 날 고구려라고 하는 것이 변방국가로 태어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국 측에 있는 각종 원전들을 전부 파악해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국에 집니다. 이 논쟁에서 져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의 중심 이동이 상고

사 쪽으로 가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사 확립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 주셔야지 도대체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우선 고구려나 한국의 상고사 연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고구려연구재단을 얼마 전에 새로 창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주된 목표는 일단 사료를 수집하고 편찬하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 때도 상고사 하는 사람들을 모아 보니까 너무나 상고사 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 있는 중에서도 견해가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한 세력을 고구려연구재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지금도 재야 사학자로 남아서 신라, 고구려, 백제는 한반도에 없었다, 중국에 있었다 해서 동명성왕의 무덤을 찾아내고 백제 의자왕의 무덤을 중국에서 찾아내고 낙화암을 찾아내고 고란사를 찾아내고 왕건 무덤을 찾아내고 지금 굉장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완전히 우리 손으로 전부 증명을 해도 중국의 공격에 이길까 질까 모를 판인데 전혀 그쪽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와 이만열 선생님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자료정리가 값어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근세사나 근대사 중심의 자료 정리가 우리들의 정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무슨 큰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전으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뿌리를 찾으러 올라가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좀 진심으로 상고사 연구에 대한 인식을 넓히시고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수용하셔서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또 안 부총리 있을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연수과정 운영 확대”에서 “한국·중국 초서 및 일본 고어 전문요원 양성” 이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도 지금 이름이 저

는 한문으로 나오고 옆에는 한글로 나오고 있는데 한문은 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이고 한글은 민족적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사고입니다. 우리 역사는 한문역사입니다. 한문역사 속에 우리 것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조차 읽지 못하는 시대가 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서 한국이나 중국 고전 원전의 초서로 된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어떤 교과과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지, 몇 개월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재야 쪽에서는 한민족대학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4개월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상고사의 정사를 밝히는 작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음번 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저하고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잘 알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의사일정이 급하게 잡혔는데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교육부 그리고 소속기관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문제는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그리고 교육부나 여러 소속기관과 공동 노력해서 교육을 살린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학생들은 과중한 학업 부담, 사회는 학벌주의의 병폐로 만연해 있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17대 국회의 교육위원회를 맡고 여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상임위 업무

보고를 받게 됐는데 오늘은 세부적인 질의보다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묶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몇 차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원 구성이 지체되면서 중간에 이러한 자료의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현안 중심의 보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만 좀 단층 촬영된 화면을 보고 있다는 느낌들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참여정부가 제2기로 들어가고 1년 반쯤 지났습니다. 참여정부 1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나름의 평가가 업무보고의 기초에 깔렸어야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런 점들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2기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 대선 당시의 교육 관련 주요한 공약, 물론 한나라당의 공약 중에서도 공통의 것이 있고 수용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쳤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꼭 지금 시기의 보고가 아니라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을 지적드리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냈던 자료 중에 어쨌든 중점과제로 제시했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 공동체의 구축, 그 중에서 교육혁신기구의 설치,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등등” 이렇게 나가는 건데 실제로 오늘 업무보고의 주요내용 중 몇 가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약에도 있었고 인수위에서 설정한 주요과제 속에도 들어 있었는데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라는 관점에 입각한 내용들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점은 뒤에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것이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인수위에서 설정했던 주요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관점에서 조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특히 최근 일련의 사학 비리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우선 동해대 비리가 있었습니다. 좀 놀랍게도 430억 정도의 비리, 학생 수가 1000명밖에 안 되는 대학인데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싶은 정도로 빌라를 구입하고 회사 운영에 학교 돈을 갖다 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의 경우에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총장이 1억 원을 수수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종대의 고질적 분규, 정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2억 5000만 원을 총장이 횡령해서 불구속 기소 상태에 있고 동덕여대, 경인여대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9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사립대학 분규가 발생을 했었고, 일주 잡은 손실액만도 5년간 2000억 원대 정도가 손실로 계산될 정도로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학비리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되는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부의 사학비리 예방과 근절의지가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최근 사학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강력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요. 또 하나는 동해대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만 준칙주의에 따른 서류상 정량적 평가로 바뀐 이후에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설립인가 심사가 대단히 불철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6대 때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사립학교법의 미비가 또 한편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법인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에 제어장치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현재 사립학교법에서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회 각 분야가 아주 놀라운 속도로 민주화되고 투명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도 교육 부문은 대단

히 지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학교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학교의 24%, 고등학교의 46%, 전문대학 같은 경우 거의 90% 정도가 사학인 조건에서 사학의 문제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미 15, 16대에서도 긴급한 과제로 그동안 제출이 되어 왔었고 그러나 15, 16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은 제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이제 17대의 과제로 넘어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경영과 학사의 분리 그리고 학교의 자율권 신장, 여기서 말하는 자율권은 법인의 자율권이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자율권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학교 각 구성원들의 자율과 자치의 확대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이 비리사학의 예방이나 재발 방지 그리고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고 현 시기의 가장 절실한 교육 개혁의 과제로 국민적으로도 그리고 17대 국회의 과제로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의견과 함께 교육부의 대책을, 물론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교육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장님께 제가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괄질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괄질의하시는 분들의 질의를 제가 나중에 모아서 대답하면 아무래도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일일이 대답을 드리기도 어렵고 나중에 간략하게 넘어가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세 분 하신 후에 그것을 포괄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고 또 몇 분하고 나가는 것이 저도 성의 있는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조금 대답을 하고 또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떨지요?

○위원장 황우여 통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괄질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오늘도 한 오후 7시 반쯤에나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간사와 의논해서 다음에 질의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오늘은 전례대로 일괄질의를 할 때에는 일괄질을 다 들으시고 소화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나중에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국가나 사회가 어려운데 우리 부총리를 비롯해서 교육부 모든 담당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63페이지에 있는 사범계 지역가산점 관계에 대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부에서 사범계 지역가산점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범대학에 대한 지역가산점제가 지난 3월 25일 현재에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재의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만이 실체적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번 4월에 교육부 자문변호사 9명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 9명의 의견은 실체적 위헌이 6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근거해 가지고 사범계 지역가산점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기관장인 교육부장관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재판관 9명의 판결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3명만이 실제적 위헌이라고 했는데 교육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적 위헌을 6명이 주장했다고 해서 가산점제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범대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교육부총리께서 사범대가 굳이 단과대학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는 무용론에 가치를 갖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범대학이 교원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사범대학의 교육과정도 혁신을 해야 되고 또 교원양성 체제도 한번 근본적으로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결정도 물론 두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나 기술적인 미비나, 혹은 실제적인 문제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정책토론을 하고 교육계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규의 미비라고 생각하고 소송적인 개정을 하는 경우에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범대학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교원이랄까, 사대의……

○**이군현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20분 저의 전체시간을 까먹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황우여** 예.

○**이군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되면 질의하기가 어렵지요.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그러나 이미 일문일답으로 20분을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20분을 그냥……

○**이군현 위원** 질의하는 사람의 시간만큼만 딱 딱 답을 하면 그것은 공정한 룰이 되겠지요.

○**위원장 황우여**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활용해 주시고 20분 내에 일문일답

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지금 우수교원확보법을 추진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군현 위원** 우수교원확보법은 우수한 사람이 교직에 오도록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장관께서 생각하는 그 정책적 수단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 생각은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하고 제도적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다면 사범대 졸업생한테 지역가산점제 주는 것을 지금 없앤다고 하면서 우수교원확보법을 주장해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이율배반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가치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두 번째 교육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경제자유특구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부총리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썄요, 시민단체도 여러 갈래의 시민단체일 수 있는데……

○**이군현 위원** 지금 부총리께서는 반대가 많다고 정보를 듣고 있습니까, 찬성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반대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내국인 입학 허용, 과실금 송금 허용, 국내 학력 인정 문제 그다음에 설립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그 외국법인이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때 그 책임을 학생과 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걱정 때문

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종의 비율 문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내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명시해야 되고……

○이군현 위원 잠깐만요,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부처의 장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NEIS 시스템 구축할 때 총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그때는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 그 앞에 C/S시스템을 할 때 구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자세하게는……

○이군현 위원 NEIS시스템이 교원 간에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이번에 교무·학사·보건 영역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얼마로 세우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

○이군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520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C/S 이후에 NEIS를 세우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다시 520억의 예산을 세워서 교무·학사·보건 행정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에게 다시 한번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52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인권을 위해서—사실상 작년 한 해 동안 이것이 갈등의 소용돌이의 원천이었는데—이 문제를 모두 합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이 금년에 통과되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것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군현 위원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법 취지가 굉장히 무색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제정의 핵심은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놀이방에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까지만 공교육으로 되어 있었던 유치원 이하 유아교육도 공교육화하겠다는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핵심은 의무·무상 교육으로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만 4세 이하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육기관에 가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계획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문제가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여성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철학이나 비전이나 큰 목표에 관해서는 장관이 대답하고요, 예산의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은 번번히 장관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육비는 만 3세 이하의 경우에 지급될 계획이 있으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원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꼭 좀 살펴봐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도서벽지가 많고 굉장히 외진 농어촌이 있는 전라도라든지 경상남도 학교에 선생님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교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하도록 해 주자” 하고 작년에 장관이 되 시자마자 제가 장관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의 2005년



도 놓여준 근무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노력하겠다고만 아까 되어 있던데 실제 기획예산처에서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지금 교원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그쪽으로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사실상 내년 예산부터는 총괄예산 자체조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체조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미추·미발추 문제는 잘 아실 텐데 군미추 문제하고 미발추 문제하고 기대이익 보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실 계획은 갖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의 일부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군대에 있을 때 제도가 바뀌어서 들어갈 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제대해서 발령도 받지 못했는데 소위 기대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분리해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일단 분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발추 문제는 작년 연말에 법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군미추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문제는 사실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미추 해결 과정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다음은 EBS 수능강의와 관련해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고교 1인당 월 평균 경감액이 4만 7000원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교생에 한하여 연간 6800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부모들이 과외라든지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경제 어려움에 상당히 비례해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팩트를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인지 제가 조금 의심이 가고 그냥 어떠한 평균이나 빈도나 이런 단순한 통계치를 써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기법을 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알기로는 리서치 앤 리서치라는 데에서 했어요. 또 국정홍보처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이미 지역적인 여건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남 같은 경우는 거의 50% 줄었다고 나와 있고요. 강남이라든가 서울 근처에서는 그 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의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이군현 위원 다음 교원 법정정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89.2%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확보를 위해 행자부에서 티오를, 목을 쥐고 있으니까 2005년도에 2만 7000여 명을 신청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안 될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께도 지금 할 수 있는 있는 모든 방법을 하고 있고 비교적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다음 교원 평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원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연말까지 평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평가 시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기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교원들이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일반 학부모나 시민들에게 비추어지면 사실 교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준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의 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교원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또 주최는 누가…… 진척된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책 토론토 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많은 관계 집단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그런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는 교육학회, 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연구기관과의 집중적·심층적인 논의와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토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9월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한 네 달 동안 토론토와 공청회를 거쳐 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군현 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교육부에는 이 정도 여쭙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하나만 여쭙고자 합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전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지요?

○**교원징계재심위원장 구관서**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교원징계재심위가 교원의 권리를 좀더 폭넓게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징계재심위 보고서 1쪽의 목적에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원징계재심위가 설치됐다 이렇게 있듯이……

전보도 2001년도 이후의 고충청구사건 심사를 보니까 61건 중에서 단 1건만 인용되었더라고요. 교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문제를 너무 법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본래 교원징계재심위는 징계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보고 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불리한 처분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교원인사 문제는 교원한테 불리한 처분이라고 일단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넓은 의미의 처벌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서구를 열린우리당 구논회 위원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교육감 선거 제도 관련한 부분하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관련한 부분 또 하나는 장애학생 치료교육과 관련한 부분, 이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200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서 선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적어도 16개 시·도에서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선거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런 단어를 쓰기 어려울 만큼 탈법, 불법, 혼탁, 과열…… 선거와 관련된 온갖 부정적인 단어를 다 양산해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교육의 수장 여러분들이 구속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는데도 교육부에서는 그때그때 언제까지 교육법을, 근본적으로 선거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했는데 현재까지 고쳐진 것은 하나도 없고 대체로 규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미봉책 정도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월에는 서울·전북 교육감 선거가 있고, 12월에는 대전, 2005년도에는 여러 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7월 선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많은 분들이 12월 이후 선거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문일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근본적인 어떤 수술을 겨냥한 접근이 없었습니다. 다만 탈법·불법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약간의 노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볼 때 7월 26일로 날짜도 결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전북 교육감 선거는 기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겨냥하는 것은 12월의 대전교육감 선거로 이것부터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출 제도는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기본 틀과 연관해서 변화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전에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바꿀 생각이요. 그 큰 틀 속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도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지금 지방교육자치 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만약 지방행정이라든지 지방교육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2001년도에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었고요. 그다음 2002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교육부에서 어떤 노력을 더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우선 제가 와서 제주도교육감 선거 때 그리고 전북교육감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등을 겨냥해서 나름대로 꽤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지역의 선거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포상금 제도를 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걸었고, 차관이 내려가서 진두지휘를 했고, 검찰·경찰과 더불어 탈법과 불법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후보로 등록하고 나오신 분들을 만나서 부탁을 하고 교육계 전반이 긴장해서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조여 가면서 탈법과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법

주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현행법상의 노력이었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닙니다.

**○구논회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쨌든 선거인단을 확대한다든지 결선제도를 폐지한다든지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한다든지 현직 교육감 및 교육 행정 공무원에게 유리하다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의 규정들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00년에 치러진 충남 교육감 결선투표 과정 중 발생한 비리폭로사태 직후 근본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법률안을 낸 이후 2003년도에 또다시 그런 발표를 했었지요.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됐는지, 확정됐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아까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제도 이런 것들과 어떻게 유사한지 확정된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16대 국회의 말미였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개혁 노력을 더 계속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더불어 이 문제를 숙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논회 위원** 교육감 선거법과 관련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관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인데 교육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혁적 시민사회단체 쪽이라든지 교원단체 쪽에서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논의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부에 이 법안에 관한 개폐라든지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잘 알고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또 하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뿐

만 아니라 2004년 3월 2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에 관해서도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장관님이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구논회 위원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외국교육기관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썽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습니까만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개방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고 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논리에 대한 정당성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교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막아야 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도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결론은 그 중간에서 나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입장은 분명하고 경제계라든가 경제부처라든가 경제를 많이 얘기하는 분의 입장들도 분명합니다. 혹은 보수계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네댓 개 되었던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것의 하나가 비영리법인만을 허용할 것이냐, 영리법인도 와서 교육활동을 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영리법인이 오는 것은 강력하게 저지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학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특히 내국인의 경우에 외국교육기관이 부과한 교육과정을 그냥 따라가고 한국이 인정하는 학위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사하고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 점도 만만치 않은 쟁점이었습니다. 밖의 진보단체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안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이것도 엄청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줘야 된다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큰 것 두 가지 더 쟁점이 있다면 외국인하고 내국인의 비율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하

게 내국인도 어쩔 수 없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 비율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에게 모든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 남녀비율, 학과 개설 혹은 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이 인가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사실상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이 적은 숫자여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결정권은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송금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정책논의를 많이 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2캠퍼스의 개념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가 제2캠퍼스를 한국에 내는 형식입니다. 제1캠퍼스와 제2캠퍼스 간 물적·인적 최소한의 이동성은 보장을 안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떼서 적정한 수준의 과실송금인가를 우리가 보고 결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교육개방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교육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논회 위원 장관님 죄송한데 강연은 좀 다른 시간에 해 주시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모체법 아닙니까?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모체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기 편하게 해 주고 생활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모범 취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네 가지 범주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송금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장관님께서 우리 교육을 교역대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류의 대상

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교역의 대상으로 상품으로다가 지금 인정하고 계신 것 아닌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저는 교육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인적·물적 이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그 부분이 우리나라 공교육 체계 속에서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한국 공교육 전체의 문제가, 외국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열경쟁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걱정 안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최고의 학교를 데려 와서 그 학교를 통해서 얼마간의 배움도 얻을 수 있고 또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사하고 한국어를 1시간씩 들으면 학력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1주에 1시간씩입니다.

○구논회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기존 한국교육의 전통윤리관이라든지 가치관을 허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데 외국교육기관을 받아들인 대부분 나라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규정을 부과한 경우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고 해 놓고 내국인을 입학하게 하는 것이 잘못하면, 교육부장관께서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면 학교장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비율을 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지 않습니다.

○구논회 위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바로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하고 어떤 연관성

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외국인 투자를 더 유인하기 위해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하고 저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경우에 외국인에게만 학교를 트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국인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구논회 위원 입학 범주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망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WTO 체제하의 DDA협상 진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리 어디까지 양허안을 제출했느냐 하면 대학과 성인교육에 한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교육을 시켜야 될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시장에, 말하자면 상품으로다가 내맡겨도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일반 다른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정화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논회 위원 현재 그 부분은 제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부산, 진해라든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주도는 대학만 가능합니다.

○구논회 위원 재정부 쪽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 제가 2003년도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 경기도를 포함해서 27개 자치단체에서 외국인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부에서 조치를 내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러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적용은 저희들이 막을 생각입니다.

○구논회 위원 확실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확실합니다.

○구논회 위원 장애학생 치료교육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개 장애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 큼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교육을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

다.

또 어떤 통계를 보니까 30만 원 미만 37.9%,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54.8% 정도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공교육에서는 대체적으로 1인당 23만 8000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원래도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치료교육을 위한 치료교육사, 말하자면 장애인학교라든지 또는 장애인특수학급을 가진 이런 쪽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보완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책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을 걱정하게 되고 장관님을 뵈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17대 국회 의정활동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향후 국회 교육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교육부에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교육부의 조직이 2실, 34과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할 자료이고 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일선 현장까지 자료를 또다시 요구해서 결국 일선 현장에서는 요구한 그 국회의원이 실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화까지 와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자료요구 시에 실명을 명기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실로 직접 문의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안내하고 자료작성의 책무를 혼동하고 결국 의정활동에 위축과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처리에 대해서 교육부의 행정 행위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각 실의 주요업

무와 교육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분석을 하게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분석자료는 당연히 교육부에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

○김영숙 위원 또 통계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9년부터 2000년 사이 2년간 정년 전 퇴임 교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통계수치를 본 위원이 요구했었습니다. 통계연보와 다르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원 현황도 본 위원과 다른 위원, 교육통계연보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차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정년 전 퇴임 교원의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통계연보와 무려 1만 1575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2003년 사이 7년간 기간제교원의 수를 살펴봐도 무려 5만 6493명의 차이가 있고 본 위원에게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통계자료임에도 통계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통계가 나와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년 전 퇴임 교원 집계에 있어서도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의 통계숫자를 보면 교육통계연보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이 두 가지의 통계숫자가 다르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매년 나오는 교육통계연보가 어디서 제작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교육부에서 제작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교육개발원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제작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김영숙 위원 교육통계연보는 매년 378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같은 내용에 대해서 통계연보상의 수치가 다르고 요구자에 따라서 다른 수치 결과로 송부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의 신뢰감과 명확성이 결여되어서 향후 요구자료의 신뢰감도 의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통계연보가 무용지물이라면 이것 역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교육부총리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하시면 되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식중독사건 135건의 36%에 해당하는 49건이 학교급식에서 발생했고 식중독환자 7909명 중 58.4%인 4621명이 학교급식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 89건 가운데 38.2%인 34건이 학교급식에서 발생했고 식중독환자 6116명 가운데 학교급식 환자가 57.4%인 350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중에서 위탁급식학교에서 발생한 사고가 직영급식에서 발생한 것보다 월등히 많아 작년의 경우 위탁급식학교 식중독환자 수가 3377명에 이르러서 직영급식학교 식중독환자 수 753명의 4.5배에 달하고 또 식중독 발생 환자율에서도 14.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위탁급식에서 식중독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또한 교육부가 실시한 위생안전 점검결과에서도 지난 2002년의 경우 직영급식의 지적률이 0.7%인데 반해 위탁급식의 지적률은 7.9%로 10배 이상 높았고 미생물 검출율도 직영급식이 0.7%인 반면에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2.2%에 달해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생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총리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또 2004년 1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독립된 식당에서 배식이 이루어지는 곳은 전체 급식학교 1만 242개교의 64.9%에 해당하는 6647개교이고, 교실배식만 하는 학교가 30%에 해당하는 3073개교 그리고 식당 규모가 작아서 식당배식과 교실배식을 병행하는 학교가 5.1%에 해당하는 522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교실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 향후 식당배식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1주일간 반전·평화를 주제로 계기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전교조의 반전·평화 계기수업자료집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서 자료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습

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교조의 반전·평화 계기수업자료는 이념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라크 파병 반대 혹은 반미의 관점에서 자료가 재구성되어 있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감성적 접근방법은 피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교육부총리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토의견을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통지하였습니까?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교조 교육자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특정단체에 대해서 눈치를 본 조치가 아닌지요?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의 계기수업과 관련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에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보인권 공동수업, 2003년 11월에 이라크 파병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이 있었고 2004년 4월 총선 공동수업 등이 계속 전개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기수업에 대해 해당교원의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요?

또 교육부가 전교조의 반전·평화 계기수업 자료집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조차도 자체적으로 분석·판단하지 못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 연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교원처벌사유 발생 시에 해당학교장 책임하에 차상급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는 처벌근거를 들어서 미성숙한 학생들이 편향되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자료로 계기수업을 받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무척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교육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집단 간의 첨예한 공방으로 교육계를 위시해서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학에 대해 현행법상 응당한 조치는 필요

합니다. 그러나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사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독특한 건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칙과 인적·물적 시설의 설치와 재정 투입 등을 설립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진국들이 사립학교제도를 인정하고 헌법 또는 기타 실정법으로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관련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며 다양화 시대를 대비하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개정안을 보면 학교지배구조 개편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게 되면 이들 기관의 대표들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구성되고 학교와 법인의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이 상실될 우려가 있겠지요?

개정안을 보면 학교장은 학교 운영의 책임경영자가 아니라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지위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법인과 학교장의 의사결정권과 지도 감독권이 상실되면 학교는 학생교육보다도 학교운영 주도권에 더 많은 관심이 표현되고 이로 인해서 내부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겠지요?

지금 교육계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공교육이 부실하고 평준화로 인한 학력저하 문제가 생겼고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하고 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올바른 교육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존도가 높은 사학의 안정적인 육성대책 없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전체 사학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현행법상 보장된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7일 사교육비 경

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를 개선하고 평가주체로는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포함시키는 다면평가제를 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교육부는 학부모 평가 부분은 빼고 교장, 교감 그리고 동료교사 등이 평가주체가 되는 다면평가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교육부가 평가주체에서 학부모를 제외한 것은 교원단체들의 찬반 논란 속에 교육부가 논의를 주도해 정책결정을 하기보다는 특정단체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찬반 논란이 첨예하면 할수록 교육부의 분명한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교원평가제의 근본취지는 부적격 교사가 없도록 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며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교원평가를 위해서는 각 과목에 대한 학습계획안이 있고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하는 교사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교육 본연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교원평가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교육 본연의 활동에 대한 평가제로 도입되기 위해서 교육부,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합의 또는 수용 가능한 협약기구 성격의 교원평가위원회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사태가 지난 4월 26일부터 발생하여 2개월이 넘었고, 인천교육청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인천외고사안대책위원회를 조직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학내 갈등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교육청과 교육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7월 5일 부랴부랴 교육감이 20일까지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해임권고안을 내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이제야 조치하신 것은 아닌지요?

또 그동안 학생을 선동해서 수업거부와 폭력투쟁을 일삼은 교사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과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요?



타 학교 전교조 교사의 개입, 민주노총 노조원 까지 가세해 문제가 더 커진 인천외고 사태에 대해 교육 당국에서는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였는지요?

교육 당국, 학교, 교사 모두가 학생을 먼저 생각했으면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좀더 일찍 정부가 나서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뒤 어떤 형식으로라도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독단적인 학사 운영으로 인해 오랫동안 학내 분규를 발생시킨 학교라는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으며, 해당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학생들의 수업보다는 자신들의 복직과 주장을 관철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을 파행 운영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자료 배부한 것을 좀 갖다 주시지요.

받으셨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받았습니다.

○**정봉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노원갑 출신 정봉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잘 들었고요. 대한민국 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관련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준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보완하는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고요. 보완의 범위가 넓어져서 선후가 뒤바뀌게 되면 평준화 정책 자체가 폐지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 법 개정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입제도의 개선,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부처의 장을 맡고 계시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총론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교육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하시면서 싱가포르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항 정책을 통해서 6, 70년대 아시아의 4룡으로 부상했고 이후 한국, 대만, 일본의 도전에 추월되어 경쟁에서 뒤지면서 최근 들어 교육허브정책을—전면적 교육개방 정책이지요—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개방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과연 싱가포르의 예를 드는 것이 옳으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육개방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 혹은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은 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인가, 부의 편중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교육의 정치 사회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테면 “교육이 부의 세습을 가져 온다”는 표현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환경에 일치하지 않는데 교육개방정책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예로 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품고 있고요.

교육개방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이 교육문제에 있어서 선진적이고, 자국 교육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교육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폐쇄 내지는 부분적 개방을 요구하는 사람은 마치 교육의 후진적 사상을 갖고 있는 식으로 양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입니다.

문제는 60년대에 미국 밀가루가 들어올 때 우리 밀 보호정책이 전혀 없었던 점, 최근의 쌀개방 정책을 둘러싸고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것이 마치 폐쇄적 민족주의이거나 지나치게 폐쇄

적인 정책을 취한다고 매도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의 요체로 삼고자 하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특별법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현황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2002년 11월 통과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여 제주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3년 12월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2003년 12월 입법 예고한 뒤 올해 6월 15일 일부 문구 수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애초 WTO협상과 관련해서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포함해서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그 흐름이 바뀌어 갑니다. 저는 편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편법으로 유·초·중등을 개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초·중등은 원래 개방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편법적으로 추가된 것인지, 만일 원래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이 예상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의 중요성은—아까 분명히 교육부총리께서 비영리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것에 대한 파악을 위한 전제입니다.

세 번째, 교육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들어왔을 때 국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나 연구 보고서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특구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쳐서 부분적인 교육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교육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각 지역마다 교육특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도 외

국 교육기관을 허용할 방침인지 하는 것이 네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은 내국인의 입학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외국 교육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선후가 바뀐 듯한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국인 입학유도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필수적이지 않겠는가라는 현황분석을 하면서,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내국인의 입학유도를 허용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법의 목적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 질의는 만일 내국인의 입학유도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입학유도는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외국 교육기관이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 경제 부처가 요구한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특별법 제정에 관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으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부적격 교사를 골라내야 된다는 등등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표현이 제가 다소 거칠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정서상 이제까지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께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학부모 특강에서 2005년부터 초·중·고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고요. 본격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그리고 교육부는 이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공청회 및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칠 예정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여당인 우리당 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조차도 교원평가제도 도입 방침에 대해서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시행에 앞서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이 당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특강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자리에서 발표된 것에 대한 배경적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정협의회를 저희가 모르게 은밀하게 거쳤는지, 아니면 안 거쳤는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현재 교원승진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도와 교원승진제도 중 이번에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낸 공약사항이 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교원평가제도가 공약사항인지, 아니면 교원승진제도가 공약사항인지 간단한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후의 정책을 세우는 데 대단히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교원승진제도에 대해서 제가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승진제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전체가 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19세기 학교를 만들고 있는 가장 구약적인 요소이다” 혹은 “권위주의적인 학교시스템의 전형이다” “교사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것이 세 번째 질의입니다.

네 번째, 충분한 당정협의 없이 발표된 교원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교원승진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원승진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계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교장임용제도의 다양화는 있었는데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 내에 TF팀이 구성됐는지 혹은 추진할 계획이라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평가제 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당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요, 혹시 다른 교감

이 있었는지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6월 3일 발표해서 이미 학부모나 학생들과 교육계 내부에서 상당 부분 기정사실화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원평가제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층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도 제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교원평가제도는—죄송합니다. 자꾸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요—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인가?

좀 센스티브한 질의지요? 어쨌든 일곱째 질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질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임용제도에서 참여정부의 공약은 외부초빙제, 보직제를 포함하여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보직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성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문 위원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하는 광성문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정몽준 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본 위원이 17대 국회에 등원해서 첫 의정활동이 이 위원회에서의 질의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감회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11대 국회 후반인 84년에 정치부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도 밖에 나가 보시면 저 복도에 100여 명에 가까운 교육부 직원들이 쪼그려 뛰기 기합 받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적고 이른바 모범답안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뿐만 아닙니다. 옆의 농해수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도 전체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 꽉 들어차서 무슨 필답고사를 보고 있는 듯한데요.

이 안에만 해도 교육부장관님 옆에 차관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및 심의관들, 과장들, 주요 보직간부가 다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하루는 교육부가 국회로 옮겨와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지난 2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부의 장관님께서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뒷줄에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들은 최소한 20년 정도 교육행정에 몸을 바치신 우리나라의 교육 전문가이고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즉석에서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충분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어서 두 번, 세 번 토론을 다 거치고 선거에 임했습니다만, 보좌관 앉혀 놓고 기다리라고 해서 모범답안 받아 가지고 답변한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하거나 중요한 질의가 나오면 위원장으로부터 양해를 받아서 잠시 뒤에 답변한다든지 또는 꼭 수치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휴대용 컴퓨터로 자료는 전송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바뀌는 모습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없을까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 달라는, 20년 전 취재기자의 눈으로 봤던 것을 한 가지 제안으로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바깥에 계시는 교육부 직원님들, 제가 질의하는 최소한 20분 동안은 좀 쉬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정책질의는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른바 상견례라고 봅니다. 상견례라는 것이 이름 그대로 서로 얼굴 쳐다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어떤 성격인지 사람의 됴됨이를 알아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뵈었습니다.

말하자면 스포츠 경기로 보면 권투에서는 보통 1회전을 탐색전이라고 부릅니다. 가볍게 잽을 좀 날리면서 상대방을 한번 지켜보는데 그래서 오늘 저도 잽을 한두 개 날려 본다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교육부장관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정권을 바꾸어가면서 두 번 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쉽게 워낙 잘 하시니까 또 시켰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은 어떻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장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정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장관할 때도 YS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나 이념적인 지향성을 크게 표현하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학계에 있던 사람인데 두 번 다 불러 주셔서 제가 온 것이 전부입니다.

**○곽성문 위원** 제가 아는 어느 은사님이 교육부장관을 한 1년 역임하신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어떤 자리에서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한 1년 동안 업무과약하다가 시간 다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론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언론 쪽에서는 교육부라 그러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1년 정도 거쳐 나가는 장관들을 공무원들이 시쳇말로 갖고 노는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두 번을 하시니까 최소한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곽성문 위원** 교육부는 얼마 전에 교육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술자리 문제 때문에 좀 신문에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저는 29년간 언론에 있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라는 것이 어떤 취재기자의 특종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라든가 또는 신속히 보도해야 되는 속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체가 다소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나름대로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전제로 볼 때 이번 술자리파문

사건에 따른 관련 보도에 대해서 아마 부총리나 또는 교육부로서 다소 좀 틀린 점이 많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냥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곽성문 위원 술자리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술인데 보도에는 양주가 12명이 들어갔다 이랬는데 이 부분이 사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로서는 다시 되풀이해서 기억하고 싶은 그런 일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변명이 됩니다. 그것은 웬만하시면…… 제가 그다음날 일단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걸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른 면으로 유능성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 자신은 없는데 자기 절제나 절도라는 면에서는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시고 그것을 평가해 주십시오.

○곽성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술을 마신 문제를 가지고 부총리 개인의 인격에 혹시라도 훼손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전후해서 교육부가 보이고 있는 이른바 태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알아보고자 질의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사실 양주가 12명이 들어갔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술 마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날 그 자리, 그 방이 1호실이라고 그러지요. 교육감님이 열두 분 계셨고 교육감님들이 아시다시피 60대 후반의 고령이신데 양주 발렌타인 17년짜리 750ml를 1병씩 마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지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술은 3명이 들어갔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술 마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셨고, 한 세 분이 양주를 두세 잔씩 했었고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일찍 가셨고 대충 일찍 끝났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가 약간 과장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12명 보도가 사실 틀린 보도가 아닌 것이 옆방에서 수행원이라든가 울산교육청 직원들이라든가 따로 또 식사를 했고 좌우간 그런 술값이 몽땅 1호실로 합쳐져서 계산이 될 때 양주는 12명으로 계산이 됐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썽, 제가 그날 저녁을 먹고 울산대학교 총장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에 빚어진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이 대충 정황으로 봐서 맞지 않을까 추정할 따름입니다.

○곽성문 위원 그날 그 자리 주선은 울산교육청에서 하신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교육감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곽성문 위원 그러면 술값도 울산에서 부담하신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284만 원이 나왔는데 그 두 방에 있었던 사람 수는 수십 명이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은 교육감협의회에서 내고 나머지 잔액을 울산교육감이 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성문 위원 술값 부분에서도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몇 가지 보도를 보면 우리 부총리께서는 술을 안 드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주량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술을 거의 못합니다.

○곽성문 위원 제 주변에도 맥주 반 컵을 마시고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가급적 안 드시는 건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체질적으로 제가 못합니다.

○곽성문 위원 우리나라의 회식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교의 관행이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게 되면 술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가볍게 맥주를 따라서 서로 건배를 하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총리께서는 맥주를 전혀 입에 안 대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맥주를 따라주면 대충 조금 남길 정도는 먹고 시늬는 합니다.

○곽성문 위원 우리 사회에서 술을 잘하는 것이 자랑도 아니지만 술을 못 한다는 것도 자랑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물론이지요.

○**곽성문 위원** 백년지대계 교육을 논해야 되는 자리에서 술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술자리회식이 파문이 된 본질은 부총리께서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때가 김선일 씨가 참극을 당하고 전 국민이 애통해 하는 시기에 외국 양주 발렌타인 17년짜리를 12병이나 시킨 호화판 술자리가 났다 이렇게 되면서 언론에 파문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 교육감회의가 끝나면, 그런 큰 회의가 끝나면 으레 저녁 겸해서 한 잔, 두 잔 건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바로 그다음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관련 보도를 보면 직후에는 발렌타인이 아니고 국산 양주였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가 술값이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공보관을 비롯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변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울산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참고자료로 나온 것일 겁니다.

○**곽성문 위원** 그리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장관께서는 술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일찍 자리를 떴다” 이 발언은 사실에 대한 확인은 되겠습니까마는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각은 아니지요.

장관님이 일찍 떴으니까, 그리고 이 술자리 자체가 울산교육감이 만든 자리이고 장관은 술을 못하고 일찍 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장관은 모르고 쉽게 말해서 교육부는 책임이 없다, 아주 극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그 일 자체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할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성문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술도 마실 줄 알고 이런 회식자리를 자주 가서 실수도 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회식자리를 가지고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파문이 있고 나면 교육부로서는 당당하게 유감을 표

명하고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자리가 아니라거나 술을 못 마신다거나 술값이 어땠다거나 또는 언론사에 전화를 걸고 찾아와서 보도를 좀 축소해 달라고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태도는 당당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앞으로 정말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선으로 이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동료 의원이자 장관으로 임명되신 정동채 장관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묘하게 인사청탁건이 불거져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입장 난처한 분들이 생겼습니다마는 4월에 바로 비슷한 사건으로 부총리께서도 또 구설수에 오르내리셨는데 며느리의 서울대 취업알선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이 기회에 해명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도 제가 하나하나를 다시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제가 듣기로는 연봉 1500만 원 정도의 조교자리였습니다. 구태여 얘기하면 제 며느리는 전문홍보기관의 꽤 대우를 받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부하는 기관에 가고 싶은 욕심에서 그쪽에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육부 국장이 제 아들로부터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서울대학교에 전화를 두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일단 쓰지를 않았어요. 쓰지 않았다가 다시 저희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 그 사람 아직도 쓸 수가 있냐고 물으니까 그 직원이 내가 전에 물어보기는 했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대답해서 다시 제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 며느리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고요.

그래서 다시 다른 홍보직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우연히 서류를 보니까 제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잘못하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 며느리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전 그때 칠레 APEC회의에 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모든 사실을 자세히 얘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도 저와 연루했다면 연루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그 담당국장은 대기발령이 나고 아직 다른 직책으로

옮겨가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문 위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해명을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흔히 하는 말입니다마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나오게 되었는데, “배나무 밑에서는 잣근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슷한 사건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바로 오지철 문광부차관의 청탁사건은 어제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으레 그렇듯이 일부에서는 “아니 뎀 굴뚝에 연기가 났겠느냐, 뭐가 있었겠지. 누구 아는 사람 말을 듣고 차관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였겠느냐” 결국은 오지철 차관을 희생양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사실은 많습시다.

부총리 며느리에 관련된 사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거기에도 유능한 교육부의 트레이닝된 고위공무원이 관련됐고 그 공무원은 또 지금 대기발령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힘센 사람들의 자기 주변 관련되는 것 때문에 힘없는 공무원만 모가지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썄, 제가 이 점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저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심경입니다. 한 가지는 정말 앞으로 내 스스로 훨씬 몸이나 마음이나 더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요 또 하나는 사람이 살다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문 위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지요. 취임하시고 나서 아주 측근으로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 자리에, 이것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마는 부총리의 제자가 되는 특정 대학 출신들로 채웠다 이렇게 해서 혹시 이른바 요즘 말하는 코드인사의 전형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이 있습니다. 부총리님의 인사정책은 어떠신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터놓고 얘기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보좌관은 장관이 혈혈단신으

로 부처에 들어갈 때, 관료주의의 숲 속에 들어갈 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또 비서실장도 장관의 인격적인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일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성문 위원** 저는 29년에 걸친 언론생활을 끝내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무거운 공직을 맡고 나서 매일 아침 양복을 갈아입고 배지를 꽂아 달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공직이 주는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면서 정말 깨끗하고 처신을 잘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도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로 존경받는 평판을 받으시는 분이요 제 주변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시다마는 오늘 다소 좀 불쾌한 어떤 질의가 있더라도 서로 공직자가 된 입장에서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챙길 것 다 챙기고 변명할 것 다 변명하고……저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심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의 조직 기능 인사 혁신 분야와 관련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을 제외하고는 교육부 전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평가에 근거해서 어떠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교육정책을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를 들면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할 때 왜 우리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교육부 자체는 평가받을 필요가 없느냐, 왜 우리 교원들의 승진제도만 개선되어야 하느냐,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교육행정기관에 그런 문제들은 없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 재정과 관련한 권한, 지휘 감독, 감

사 기능과 관련해서 사실상 교육부나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하고 때로는 개혁되어야만 우리나라 교육전반이 변화하고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관치교육 중심에서 이제 자율적인 교육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시장의 논리를 빌린다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쌍방향의 시스템을 통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중앙집권적인 교육형태에서 분권화하면서 자치 교육의 문제의식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효율과 경쟁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교육의 문제들도 제기되어 있고,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 또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인재 양성과 관련한 변화도 요구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교육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했고 자기를 개혁하려고 했는가가 궁금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한 보고를 보면서 사실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진현황이 있고 나름대로의 성과와 반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짚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현황과 평가, 반성, 향후계획의 이런 방식들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책평가가 진행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 나가는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이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정책의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되기도 하겠지만 일회성으로 집행되는 정책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적어도 국가정책이라면 다년간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텐데 물론 매년마다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매년 단계별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특히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할 때 1년간 얼마만큼 진행되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문제이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강해서 최종적인 어떤 정책이 완료되어야 하는, 5년이면 5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동적으로 파악해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의 어떤 변화와 개혁들을 추진하는 데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분히 평면적인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보고일 수는 있으되 우리가 한 방향을 가지고 교육개혁, 교육의 어떤 변화와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 파악한 것이라면 결례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과정에서 성과와 반성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특히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토론해 보고, 그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을 때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새로운 전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더 강화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부 자체가 어떠한 변화와 개혁을 진행했는가, 가능하다면 교육청까지 해서 교육행정기관이 어떠한 변화와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했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책평가를 강화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해 내는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측면들을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까마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한나라당 소속의 비례대표 진수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총리께서 일괄답변을 하게 되면 부실답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기에 그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데 아까 지병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저도 비효율적인 관행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교육부 공무원이 대거 국회에 출동해서 하루 종일 계신데요, 물론 국회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너무나 대거 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3초 인사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그것이 1년에 한 번 있든 4년에 한 번 있는 일이든 간에 그 부분은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비효율적인 관행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우선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20개월 장관을 했는데 그때 저도 같은 뜻이었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서성대는 저 많은 분들은 앞으로 당연히 오지 않고 여기 제 뒤에 계신 분들도 꼭 오신다면 국장님들 몇 분이 오시고 다른 분들은 오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문건이 2004년 업무보고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이 17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이고 앞으로 4년이 지속될 것이고 이 정부도 임기가 4년이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 한 해 것보다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문건 8쪽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단계적인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4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초·중·고는 어떤 모습이 되고, 대학은 어떤 모습이 될지를 구체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문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큰 그림,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도 철학과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수희 위원**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그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갖고 계신 교육철학이 궁극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 제고, 경쟁력 강화,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이 세 가지 기본방향에 우선 순위가 있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계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세계도 협력해야 되지만 우리 민족도 체제 안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형평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쟁성과 사회 통합성·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형평성 이 두 축에서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둘 중의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을 다 살리면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철학입니다.

○**진수희 위원** 그것이 제일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위원** 예를 들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수단들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을 놓고 볼 때 이 세 가지에

배당된 예산비율이 대강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산을 지금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어떤 것은 제가 들어온 후에 정책적인 방향이 잡혀진 것이기 때문에 실천이 내년에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복지 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그렇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이 다 강조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리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업무가 공교육 내실화겠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공교육 내실화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의 어떤 결과로 되는 것인지 사교육비 경감이 공교육 내실화를 가져오는 식의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문건을 보면서 발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 내실화 과제와는 별도로 마련되어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의 과제가 될는지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아까 이군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R&R조사라든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99년 이래 사교육비가 최초로 경감된 것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EBS 수능효과 덕분인지, 아니면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 때문인지 그 순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EBS 수능효과로 보고 싶은 희망이 있을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확하고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EBS 수능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져갈지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제시할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순효과를 빨리 분석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아까 순연히 EBS 수능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순효과를 찾아내는 분석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EBS 수능효과도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교육비 경감하고 공교육 내실화의 문제는 꼭 저희들이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사교육비가 너무 창궐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교육이 황폐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가 여기에 천명된 것입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굳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공교육 내실화의 한 과제로서 추진한…… 이 문건에서 보면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공교육 내실화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발표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것은 워낙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해열제랄까 이것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단기대책일 뿐이고 저희들에게 10개 대책이 있는데 중기대책이랄까 근본적인 대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선지방 후추침이라든가 내신제도에 더 역점을 두어서 대입전형제도를 바꾼다라든가 선택의 가능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데 저는 EBS 수능과 관련하여 이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EBS 수능은 원래 공교육의 어떤 보완조치로 마련된 것인데 성공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조수단이 아니라 완전히 공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보면 “EBS 수능강의의 성공 여부는 이번 수능시험에 EBS에서 강의한 내용이 얼마만큼 나오는가가 관건이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6월에 실시한 모의 수능에 70% 이상의 내용이 출제되었다면서 EBS 수능이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이것이 성공하면 할수록 공교육을 완전히 대체해 버려서 학교에서 선생님은 EBS 강의를 녹화해서 틀어주고 비디오 스위치만 누르는 상황이 된다면 학교 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습을 통한 신뢰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한테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EBS 수능강의라는 것은 공교육을 대체하든가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수업이 위주고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에 있어 EBS 수능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비교적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지나치게 이쪽에 의존할까봐 사실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수능시험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 수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BS 수능 교재 작성부터 감수 과정, 그 후에 가르치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 수능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 수능시험에 출제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교육적으로 연계되어야 되고 그 중심이고 핵심이고 마지막 결론의 장은 교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예컨대 EBS 수능을 보는 것으로 강의시간을 대체해서는 안 되지요. 방과 후에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수업 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질을 대체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EBS 수능이 가장 성공했던 영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교감선생님하고도 두 번 얘기했는데, 대구 영신고등학교가 그렇게 뒤쳐졌는데 수능시험하고 연계도 되지 않았던 과거에 EBS 수능을 통해서 그렇게 전국적인 명문고등학교가 어떻게 되

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대답은 꾸준히 EBS 수능을 청취했고 거기가 워낙 번두리이기 때문에 학원에 갈 수도 없어서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EBS 수능을 열심히 보면서 수능 강사의 좋은 교육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현혹되는 것 같으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기계발을 열심히 했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EBS 수능이 갖는 또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도서벽지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선생님들이 EBS 수능에 맡기고 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좋은 강의를 아이들이 들으면 자기도 질세라 열심히 하시고 더 좋은 강의를 하십니다.

○진수희 위원 저도 그런 케이스가 보다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어제 7월 5일자 한겨레 1면 톱으로 나온 기사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학급 수는 증가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사는 57% 밖에 충원되지 못했다. 심각하게 학생교육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학급 수가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일환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기본적으로는 서울 같은 대도시, 수도권은 계속 주민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서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할 필요가 늘어납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학급 평균 학생 인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굉장히 줄어들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학생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화급하게 필요한 학급 증설이나 학생 수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불가측한 인구이동에 의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얼마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중장기적인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원들을 더 늘릴 수 있는 문제 또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교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질, 이런 것을 언급할 수준에서는 한참 멀리 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법정 교원 확보율이 89%선이거든요. 물론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질적인 제고를 하면 그래도 어렵사리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NURI사업이라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거기 기대효과에 보면 '08년에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을 70% 이상 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업률은 얼마나 되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43%입니다.

○**진수희 위원** 43%에서 70% 이상이면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치인데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시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생각은 지방 대학이 거점이 되어 산·학·연 혹은 산·학·연·관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커지면 지역에서 인재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취업률도 높아질 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일자리가 대충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이다 그런 추정도 하시면서 취업률이 산정된 것인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우선 NURI 사업의 경우만 해도 우수사업단 111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여기에 대학의 학생 인원 감축 플랜도 들어 있고요. 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진수희 위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마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 충남 아산의 복기왕입니다.

우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이런 구조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육개혁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부총리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음번 답변시에는 소소한 부분은 답변은 안 하시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넉넉한 여유를 가진 교육위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로 소수 정예만 나오시고 나머지 직원 분들은 일선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자신 있게 응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국회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국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진행시킬 텐데 저는 최소한 오늘 여기 오신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부터 운영에 관한 개혁을 자발적으로 먼저 해 나갔으면 하는 자체 제안을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께서 “15대 국회와 16대 국회가 어떤 상임위였다는 것이 역사에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7대 교육상임위에서 적어도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바꿨다는 평을 받는 역사를 남기는 상임위였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지난 16대 국회 때에는 제대로 상정조차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법인과 학교

운영의 분리라든지 이런 원칙적인 부분 그리고 사립학교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운영에서의 민주성·투명성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작지만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 한 가지는 구성원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화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위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회,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회 그리고 학부모회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체계를 초등학교·중등학교처럼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대학평의회나 대학운영위원회 기구들을 심의기구화 해서 법제화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에 꼭 포함을 시켰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학교급식법 관련 직영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도, 한나라당 소속이시니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영과 우리 농산물 그리고 무상급식 부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직영 부분은 강제화했으면,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표현하는 것이 WTO협상에 위배될 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담았으면 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저는 의무교육기간,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되어야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이나 국가예산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공동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고민하는 모습을 시민사회단체나 혹은 학부모들에게 보여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 제가 교육상임위를 지원한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제가 지역구를 정하면서 지역으

로 초등학교 전학을 시키니까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지표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입니다. 이것을 촉진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개혁의 꼬트머리에 있는 부분이 저는 교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해남부터 서울까지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신의주까지, 두만강 어귀에 있는 마을까지도 동등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속에는 사실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 69개 구라고 한다면 광역시지요. 출신자들의 2003년 서울대 입학 정도가 67.5%, 2004년이 66.4%, 반대로 89개 군 지역 출신으로 치면 2003년 1.2%, 2004년 1.6%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지역 교육 불균형의 심화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과 도시, 각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교육 분야에 총체적으로 우수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우선적으로 지방에 우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됐으면,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도시와 지역 간에 일종의 교원들의 소통,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근무를 하던 교원이 군이나 농촌·도서지역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혹은 교감이나 교장 임용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을 구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특히 사교육 부분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교육 부분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이지만 농촌지역은 사실상 사교육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찾아다니는 학습지 이외에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려운 것이 농촌지역인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지방을 떠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에 먼저 할당을 하는 정책을 현 교육부에서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단적으로 수능과 관련해서 지역이 겪는 고통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 같은 경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고사를 보기 위해서 옆 도시로 전날 가서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설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갖는 불이익은 아마 돈으로도 환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고사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각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부터 교육부에서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자기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안 되면 어느 한 지역에서만 고정해서 봤던 것을 로테이션 형태로 해서 본다든지 이런 정책적 대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이디어인데 지난번에 NEIS 과정이라든지 보면서 교육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교육 당사자들이 모인 교육 갈등조정위원회를 교육부에 이해조정과 자문기구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교육 갈등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가'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교원법정정원 문제와 표준수업시수 문제가 연동되고 이것이 예산과 연결된다고 저는 보는데 법정정원 문제가 해결되면 표준수업시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 단계에 맞게끔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교원단체가 제시하는 요구와 교육부 제시안이 제가 볼 때 약간 웃긴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요구하는 시간이 16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현 17.4시간보다 더 많은 18시간을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난센스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현명한 대응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엇그제 국회에서 야당대표께서 스위스 IMD 발표를 인용해서 우리 교육 경쟁력이 최하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OECD 발표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하다는 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의 객관성과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신 말씀 중에서 획일적인 하향평준화라는 진단을 하시고 교육의 경쟁과 선택을 도입한다고 하시면서 자립형 공립학교 제도를 제안하셨거든요. 자립형 공립학교 제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 속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여기 나왔습니까?

○복기왕 위원 아니요. 박근혜 대표께서 제안하신 것이고 적어도 한 당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교육부에서도 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입장 또한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립형 공립학교 부분이 저는 기본적인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현충일이 지났고 6·25가 지났습니다. 제주도의 4·3항쟁이 역사적으로 복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일반적으로 4·3사건이라고 표현하고 6·25가 되면 동족상잔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화를 어떻게 안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반복이테올로기를 부추기고 50여 년 전의 살인마 누구, 이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게끔 여전히 일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일선 학교아이들에게 최소한 통일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평화를 우선시 할 수 있는 식의 통일교육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 나가고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도 그런 식의 통일교육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금 복기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박성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저희 당 초선 위원들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처음 진행하고 있는데 보완말씀을 드리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소속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위원들의 공감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교육개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라지는 국회상을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좀 보여야 되겠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될 많은 분들이 여기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서 상임위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고 교육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상임위에 와서 보완 질의·답변하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 모든 질의답변을 교육부총리께서 하시는 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교육부총리께서 답변하더라도 그 해당부서의 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시는 정책담당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전에 서면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담당자들이 최소한으로 나오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많은 교육부 직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출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내일 상임위 때 좀 이룰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간사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목격하게 됐는데 문제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습니까마는 그렇게 아주 쉽게 나올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쉬운 해결책이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문제를 공감하면서 당장 내일 어떻게 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당장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봉주 위원** 제 제안은 이런 문제를 개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주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17대 교육상임위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매 국회 때마다 되었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요.

오늘 제가 메모하기에도 지병문 위원님, 박성문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복기왕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봉주 위원님까지 다섯 위원님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 양당 간사께서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들도 함께 모여서 교육상임위원회운영개선에관한위원회라고 그럴까 구성해서 교육부 당국과 또 우리 국회의 사국하고 함께 논의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양당 간사들 간에 오늘 이 상임위 마치고 의논해 주셔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면서 내일 다시 어떤 결론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을 죽 해 보지만 오랜 관행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늘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또 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원칙적인 동감을 표시하셨으니까 좀 신중하게 양당 간사가 그 점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교육부 옆에서 연구자로서 또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죽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와 응답을 죽 들으면서 지금 시점이 교육부나 교육부총리로서는 정말 힘든 때구나 하는 것을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총리께서 지금 어려운 자리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격언에 따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보고를 검토해 봤는데 이 보고를 보고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에는 참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교육부의 한계나 교육부총리의 한계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정부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근본적인 질의를 드릴 건데 교육부총리께서 답할 수 없으시면 답을 안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먼저 제가 추진현황의 챕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교육 내실화의 가장 핵심은 학교에 자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준비가 되고 의욕이 있는 학교부터 힘을 실어주어서 변화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되는 데부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께서도 오늘 자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 자율의 중요성은 여야 관계없이 지금 다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율이라고 했을 때 사실 자칫하면 평준화 논쟁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평준화라는 것이 획일적인 정부규제와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자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평준화를 다 풀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공교육 내실화를 보면 평준화 제도의 보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준화 보완이 아니고 학교 자율화로 크게 한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빠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평준

화에 대한 국민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부는 어려운 선택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에서 자립형 공립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얘기하게 된 배경은 자율학교라는 현재의 교육부 제도가 너무 완만하게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수로 보면 2002년에 32개교, 2003년에 65개교, 2004년에 83개교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계 고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교까지 포함한 또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제도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름이 꼭 자립형 공립학교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일단 자율을 원하는 학교, 변화를 원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될 학교에 좀 과감하게 자율을 주는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형 사학 같은 경우 이것 역시 평준화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한치 앞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현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교육부나 교육부총리께서 이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최근에 제가 참 다행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평준화 논의가 비교적 생산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1, 2년 전만 해도 '평준화 논의'하면 일각에서는 특히 경제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평준화를 당장 해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등학교 입시의 복원 혹은 부활까지 생각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졌어요.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준화의 틀이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조금 거두면서 함께 보셔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죽어도 지금 형태의 평준화를 지키자는 것도 이데올로기이고 무조건 평준화를 해체한다는 것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함



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체제를 보완 개선할 수 있으면 보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평준화 체제는 조금 잘못하면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 왔느냐, 안 가져 왔느냐 이 논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다는 현재의 체제를 그냥 붙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지키면서 여기에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쪽으로 한 걸음씩은 더 가야 이 안에 역동성이 생기고 경쟁력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적인 입장이나 자유주의적인 입장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앞으로는 찾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고 학교의 입장에서는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조금 더 다양한 틀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대답입니다.

○이주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원정책인데 저는 교원정책의 핵심은 잘하는 분들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드리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모든 교사들한테 높은 봉급을 약속하고 안정된 직장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교원복지 대책이라든지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모든 교사한테 차별 없이 잘해 주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원복지도 교원 평가와 맞물려야 되고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교원평가 제도를 강조하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원 평가가 사실은 학교평가와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원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학교에서 잘하고 못하는 교원을 가려내는 것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를 가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하는 학교의 교원들에게 공동으로 집단성과제가 도입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교사들 간에 협력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교원들은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집단성과급을 학교평가와 연계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이 사실 잘못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폭넓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교사에게 더 좋은 인센티브를 주나 하는 관점에서 교원정책을 좀 과감하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체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평가가 교사들에 대한 통제기제나 경쟁 유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기 개발의 길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예컨대 학업성취도를 얼마만큼 올렸느냐 이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것이 평가의 틀을 찾기가 워낙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창의성교육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늘렸느냐 하는 것, 단순한 학업성취도 이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당연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일꾼으로 크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측면도 얼마나 개발시켰느냐 이 점도 함께 평가하고 싶어서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 정책인데요, 저는 앞으로 교육복지 정책이야말로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최근에 이쪽의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복지 정책이 시작되려면 교육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또 학력이 얼마나 저하되고 있는지,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력 대물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학력에 대한 평가가, 물론 이것도 입시지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정보 공개도 안 되고 있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지역에 비해서 호남지역의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것 발표되면 난리 난다

이런 식의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학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학력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의 핵심은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학력 격차의 실상을 다 덮어놓고 어떻게 교육복지를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학력 격차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학력을 평가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기화되고 있어요. 학교 편차를 드러낸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력을 국가 수준에서 제대로 판별하고 키워 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로 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도가 뭐냐는 데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렵사리 1%였던 것을 3% 샘플링을 해서 평가하는데 이러면 학력의 추이는 알 수 있어도 실제로 어떤 학교, 어떤 학생집단, 어떤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사회적 합의라든가 교직원체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행할 용기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 아주 집요하게 토론하시고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대답을 모아 주십시오.

○**이주호 위원** 다음으로 대학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정책은 앞에서도 몇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학교정책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학교정책도 바로 앞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육은 좀 더 과감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대학 법인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95년 교육개혁을 할 때 일본이 우

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올해 국립대학 법인화를 다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너무 지나치게 관료 주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국립대학 체계가 일본을 쫓아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국립대학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법인화가 해답입니다. 이것도 물론 국론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육부가 어려우시더라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국립대학 법인화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계속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말~5월 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레에서 열린 APEC 교육장관회의에 갔었는데요. 일본의 문부과학성대신도 오고 중국에서도 교육부장관이 왔습니다. 그 셋이 회의도 하고 자주 만났는데 중국 장관이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자기들이 한 수 놓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엄청나게 수집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어느 정도 연구가 되면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어떤가를 점검하고 토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지금 부총리님 말씀을 들으니깐 일본한테 뒤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한테도 뒤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국제화인데요, 사실 국제화 쪽도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영어교육에 대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습니까마는, JET Program(Japanese Exchange & Teaching Progra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취업하는 데가 JET Program입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대학 졸업생들을 과감하게 데리고 와서 일반 학교에 다 보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졸업생들을 데리고 와서 학교 현장에서 영어 원어민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어 과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방법으로 외국의 영어 원어민 교사들을, 특히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파트타임으로 과감하게 채용하면 비용도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경우 과외비 절약효과도 있고 또 국제화도 상당히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1996년에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을 사실 제가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도입 여부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때 도입을 못 하고 아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부과학성대신을 만났더니 자기네가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어민들을 불러들여서 이 양반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마지막으로 대학입시 전형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우려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올 8월에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 대해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과격한 대학입시 방안이 제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사실 내신제도의 비중을 과감하게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나라가 80년 초반에 내신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정착이 안 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잘하는 학교의 10등하고 못하는 학교의 10등을 똑같이 인정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잘 인정 못 할 것입니다. 그 정보는 사실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의 유용성을 높이려면 학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평준화의 우려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하니깐 결

국 정부가 강제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강제하는 확실적인 내신제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 계속 되풀이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다시 이 정부가 교육혁신위원회의 과격한 방안을 현장에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로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요, 교육혁신위와 대화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보님도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회 멤버이고요. 여기에서 과격한 어떤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인호 교수님이시고요.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이주호 위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정말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열린우리당 의산을 조배숙 위원입니다.

교육문제는 우리나라 현안 문제 중에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는 교육에 철학이 있고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생각들이 서로 다 다르고 대립되고 쉽게 의견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장관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많은 직원이 나와 계시고 고급 인력이 대기 상태에 있고 따라서 사무실에서는 행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6대 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법사위원회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검토

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은 거의 다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 33면을 보면 세계 수준의 대학교육을 하겠다, 연구력도 확보하겠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640억 들어가고요.

주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기초학문 인프라 구축, 기초학문 연구력 증진……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모든 대학을 다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 생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고 기준에 합당한 대학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준이 없다면 자칫하면 나눠 먹기식이 되어 가지고 이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을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말은 모든 대학을 그렇게 못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델로 삼는 세계 수준의 대학이 있는지, 과연 세계 어느 대학을 세계 수준의 대학 모델로 삼고 닮아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연 교육부 관리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생각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삼천몇백 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세계 수준의 대학 연구비 지원 이전에 저는 그 나름대로 대학 운영의 소프트웨어적인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대학이 어떻게 해서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됐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대학 스스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우리 국내 대학 중에 우수한 대학들이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될 어떤 시스템을 갖추도록 돕고 그 후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의 경쟁력 제고, 세계 수준의 대학,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

셨습니다.

기본적인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모든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그동안 양적 팽창만 거듭해 왔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이 199개입니다. 2년제 대학이 156~158개 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대학 수가 이렇게 많고 기초단체의 수보다도 1.5배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생명력을 갖추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은 통폐합되고 연합체제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골고루 나눠 주는 식의 재정지원 방식은 전혀 없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지원받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특성화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구조개혁은 특성화를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지방대학 육성으로 지방의 우수하고 능력 있는 대학이 육성되어서 국가균형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산학협동입니다. 예컨대 구조개혁,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 산학협력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되어서 돌아가는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수준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단을 만들어서 사실상 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대학, 클 수 있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대학들을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겨냥하기는 7, 8개부터 플러스 알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그 부분의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정말 세계 수준의 대학 모델을 몇 개 정해서 가지고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세계 수준의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도 꽤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엔 16.5% 정도 인원을 감축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대학교야 평

장히 우수한 대학이고 학생도 더 키우는 것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학부, 대학원 다 조금씩 줄입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 비율도 개선하고 경쟁력도 높이고 연구 역량을 오히려 질적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백화점식 경영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특성을 지향하는 쪽을 더 생각합니다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모두가 철칙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연구중심 대학, 교육중심 대학, 직업중심 대학으로 가능하면 스스로 선택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전체 틀로서 선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안에서 단과대학별로 방향을 다시 설정해도 좋습니다마는,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 대학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예요. 일부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자율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또 일부 대학은 교육, 직업 중심으로 바뀌 가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발전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하버드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글로벌 시대인데요, 특히 중국과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인적 교류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민이 10년 사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북경이나 청도 이런 중국의 지방에도 상당수의 우리 교민들이 있는데 자녀 교육문제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외교관이나 일부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고 대다수 우리 교민들은 그렇지 못해서 중국 학교에 보내는데요, 중국 학교를 보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관이나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없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외에 교육관들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조배숙 위원** 지금 보면 일시 체류자만으로 볼 때 일본은 10만이고 중국은 벌써 17만이 넘었습

니다. 그런데 교육관이 중국은 2명, 일본은 5명입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도 중국은 7개, 일본은 4개인데 파견자 수 같은 것을 보면 중국은 15명, 일본은 19명…… 과거에는 재일교포도 있고 일본하고 교류가 활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교육부 내에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이 제가 7, 8년 전 장관했을 때부터 숙제였습니다. 일본을 줄이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요. 중국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관 수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네요.

○**조배숙 위원** 중국의 교육관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해서 그런 불편이나 요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오히려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대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사범계 대학 출신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이 2008년까지 경과규정을 두는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범대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교사가 되려고 할 때 비사범계 대학 출신도 교직과정만 이수하면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범계 대학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범계 대학교수와 학생이 사범계 대학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 예산요구안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범대생에 지급하던 사도장학금이 2005년도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사범대가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비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시키는 근간으로서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가 지금 교원양성 체제 개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이 폐지됐다고 해서 꼭 사범대학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두 달 후면 조금 자신 있는

대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마지막으로 임시이사 선임 절차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분쟁 때 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조배숙 위원** 그 선임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명망가나 교육부 출신의 전직 관료나 알음알음으로 담당자가 아는 높은 사람으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별 의견 제시를 하는 분도 없고 최근에 임시이사로 파견된 관선이사장이 학원 매각 추진에 개입되었다 하는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 임시이사 선정과정에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교육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학분쟁과 연관된 거의 모든 문제를 이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미리 숙의하신 후에 거기서 제의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든가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정하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아주 최근 임시이사 선정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될만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이 정상화됐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님이 이사장이 되셨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학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교육부의 퇴직관리가 들어가고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공명정대해야 되고 또 교육부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순서입니다만 몇몇 위원님들은 이석 중이시니까 재석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럼요.

○**위원장 황우여**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우선 지방문 위원님께서 대학 개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대학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 이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대학교의 안경환 법대학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서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제의하고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역량 강화하는 것과 경쟁력 강화 쪽으로 가고 경쟁력 강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보직을 줄인다든가 학교의 구조나 조직을 조금 변형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교수, 학생 비율 같은 것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지금 31명에서 21명으로 그 비율을 낮춰서 경쟁력을 높일 생각이요 또 학생 수도 어떻게든지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안에서 학과 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 국립대학교 연합체제안 또 퇴출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곧 조금씩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대학이 사실상 이런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구조개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대학의 경우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방 대학 발전에 저희들이 기여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대학 개혁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누리(NURI)사업에 관해서 물으셨지요? 죄송합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역점을 둡니다. 누리사업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간평가, 연차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누리사업도 결정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할 생각입니다. 평가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거나 수준미달인 경우에 지원을 중단할 생각입니다.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혁신위와의 관계를 물으셨지요?

○지병문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교육혁신 위와는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혁신위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직업교육의 강화 또 교과서 문제, 교육지방자치제도 문제, 대입전형제도 이런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저희들도 정책연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로 협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법과 연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혁의지를 갖고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기홍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황우여 유기홍 위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통계자료에 관해서는 작성기준의 혼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교육통계연보 등등 그런 착오가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에 관한 질의를 주셨지요.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주셨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급식이냐 직영급식이냐 하는 얘기인데 위탁급식의 경우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직영급식의 경우는 사고가 훨씬 적습니다. 우선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리과정이 믿음직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직영급식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예산과 인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직영급식으로 옮기고 무상급식으로 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직 기본적인 입장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쪽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것 그리고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도와드리는 수준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직영 체제이고 가능하면 학교가 급식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쪽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반전평화 계기교육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참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전 주에 있었던 일인데 왜 교육부가 그렇게 미온적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았습디다. 6월 28일 그 자료가 인터넷에 탑재가 되고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곧장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저희만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갖고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거기에 답을 구했습니다. 사실상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지나치게 반미·반전 쪽으로 편향된 자료가 다수라는 것하고 정서적인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것하고 나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너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교조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청에 철저한 장학지도를 청하고 관심을 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교육청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는 쉽지 않는 일이었고 만약 정도를 지나친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다 중립적이고 균형된 수업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선일 씨 경우도 하나의 준거가 됩시다마는 테러라는 반인도주의적인 초미의 그런 만행의 문제점도 함께 해서 균형된 시각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총선 때는 전교조가 계기교육을 했습니다만 비교적 별로 문제가 제기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곧장 거의 동시에 수업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저희 교육부가 만든 것을 더 받아 썼고 전교조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수위를 조정했습

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노력이 서로 거듭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밀폐된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교사들의 수업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교조가 겁이 나서 그렇다 일부 신문에서는 그러는데 그런 입장은 아니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관여를 할 태세는 항상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의 개정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 이신데 저희들은 사립학교가 창설자의 건학이념에 맞춰서 잘 관리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고 건학이념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다시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상 사학 비리가 너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리를 아주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또 교사회하고 학부모회는 우리가 이것을 제도화하는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 이것을 뛰어 넘거나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의 새로운 갈등 요소를 만든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평가에 관해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집단과 논의하고 교직원체라든가 학부모단체라든가 혹은 시민사회와 논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컨대 다면평가제에서 학부모를 완전히 제외한다든가 그렇게 정리된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적격 교사의 퇴치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적격 교사가 발견되는 경우에 예컨대 특별연수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부적격 교사가 새롭게 자기 갱신을 할 수 있는 길도 찾아져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뒷단계라고 생각하지 당장 이것을 겨냥한 어떤 정책적인 시도를 할 생각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외고 사태에 관해서는 제가 죽 보고도 듣고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대답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봉주 위원님……

싱가포르의 경우는 적어도 국가경쟁력이라는 면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존스 홉킨스대학이 갔다든지 시카고경영대학원이 갔다든지 정말 세계의 우수한 대학이 가서 그쪽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인재 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이 부의 세습화라는 얘기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사회 경제적인 변수가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인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 초등학교를 개방하는 것 혹은 고등교육을 개방하는 것을 진보적인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계 인사나 경제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에도 정봉주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치 개방이 진보고 개방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고 유보적이면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방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가지 정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간략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유, 초·중등은 개방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편법적으로 추가된 것인지, 만일 원래 계획이 있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방 차원이 아니라 우수 교육기관의 유치 차원에서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뒤떨어지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시월찮은 교육기관은 저희들이 받아들이 생각이 정말 없습니다.

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현재 설립이 예상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중·고 과정의 사립학교가 인천 송도에 유치될 전망이 높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 가능성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말이 학교가 와서 제 구실을 하고 뭐가 우리 교육에도 긍정적인 충격을 줄 것인가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 교육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들어왔을 때 국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나 연구보고서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나 중국, 일본 등에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가서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또 향후 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교육특구에 영향을 미쳐 전면적인 교육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물으셨습니다.

교육특구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은 불허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외국인학교는 허용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또 자치단체들도 현재 각 구역마다 교육특구를 요구했는데 이곳에도 외국 교육기관을 허용할 방침이냐고 물으셨는데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내국인의 입학 허용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법의 목적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또 외국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내국인을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이미 작년에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내국인 입학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주어진 한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국인의 입학 허용은 외국 교육기관이 요구한 것인가, 아니면 국내 경제부처가 요구한 것인가? 양측이 다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다음 교원평가제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를 가졌느냐는 말씀인데 당정협의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학부모와 얘기하는 자리에서 별안간

터트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기 도중에,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이제는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발에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는데 MBC의 기자가 와서 교원평가를 할 것이냐고 저한테 되물어서,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있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정책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간신문에 교사 평가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정협의회 전에 제가 교육 내 실화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원의 수준, 교원의 질을 능가하는 교육은 없다는 얘기를 하다가 한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원승진 제도에 대해서 일각에서 19세기 학교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데 현행 승진제도에 비합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원평가 제도를 교원평가 제도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양성 체제, 교원연수 체제, 교원승진 제도, 교원평가 제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고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교원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교원승진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분리해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원승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교원승진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함께 토론하고 정책 논의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발표할 때 들어갑니다.

또 교원평가 제도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통제기제나 경쟁기제로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창조적인 자기계발 기제로 쓰실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부터 전면시행이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비교적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원평가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 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느냐?

모든 교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인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원들의 자발적 능력개발 계기가 되고 수업의 질이 높아지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 업무보고에서 보직제가 빠졌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선출보직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이 문제가 중요한 논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아직 정책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출보직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경우도 대학 총장님들을 직선하다 보니까 대학교가 그냥 망가집니다. 분열되고요. 선거의 열풍 속에 휘말립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마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은 학교는 7, 8명 되는데 교장을 뽑기 시작하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책대안으로 이것이 배제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교육부하고 교육청 평가는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교육부는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평가도 하고요, 국무총리실에서도 평가하고 상반기에 평가하고 후반기에 평가하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항목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평가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평가위원들이 와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제를 실시해서 전국의 2000명 교장선생님,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들을 포함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받고 있고 자체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 평가도 하고요. 교육청 평가도 함께 합니다. 교원 평가만 하지 않겠습니다. 교원 평가, 학교 평가, 교육청 평가, 교육부 평가는 계속됩니다.

또 수요자, 분권화, 공동체가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것에 대한 교육부 철학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1995년 5·31개혁부터 교육부는

수요자 중심 체제로의 제도 수정을 선포했습니다. 분권화랄까 자율화 쪽으로의 저희들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또 사회적 형평이나 공동체를 위한 노력도 합니다. 다만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합니다.

그다음, 현황을 얘기하고 자기들이 일한 업적의 성과를 평가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환류 그래서 더 큰 개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하려고 지금 꽤 애쓰고 있고요. 진행과정을 조금 동태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보고서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교육부 자체가 어떤 변화와 개혁을 진행하는가?

특히 정책평가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책 모니터링하고 정책 고객과의 대화와 협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책 고객과의 대화와 협의를 위해서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표현이 좋지 않습니다. 좀 관료적이다마는, “당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정책 고객 관리다. 정책을 기획할 때부터 정책 고객, 정책 수요자에 대한 방침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 정책은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정책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와 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해서는 저는 전문가에게만 의뢰해서도 안 되고 또 일반 대중이나 사회적 합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시하고 전문가의 전문성에 입각한 분석과 노력 또 일반 다양한 정책 고객과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서 어떤 수준에서 합일이 될 때 정책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장관을 하고 학교를 갔더니 학생들이 “무엇이 마음에 안 들더냐?”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책을 시작만 하고 평가는 전혀 안 하는 나라다” 그렇게 애

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 점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평가를 좀 열심히 하고 그 경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그것을 제 대답으로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안 계신 위원님께 대한 대답은……

○**위원장 황우여** 복기왕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간략히 요령 있게 그리고 좀 분명하게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논의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딱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학운영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를 제도화할 것이냐 혹은 임의기구화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임의기관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진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급식 문제는 아까 대답을 올렸고요.

우수교원확보법 문제는 교육복지와 연관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이쪽 측면에서 좀 연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쪽 측면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다.

학력의 세습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에 우수한 교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혹은 농촌의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입장은 저희들이 아주 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특별전형이 지금 3%인데요, 저희들이 4%로 올리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 있는 인재들에 대한 우대랄까 특별전형이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항상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강조하고 총장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고사장과 연관해서 저희들의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하든 뭐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제가 좀 잊어버리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

니다.

또 이 점은 위원님들이 함께 좀 연구해 주셔서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도 참 도움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교육 문제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사정위원회처럼 정말 진보적인 교육단체, 혹은 조금 보수적인 지역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가단체 등등이 포함되어서 중요한 교육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창출해 주시면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교단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여러 부류의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토론하고 이런 초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쟁점에 관해서 정말 나라의 앞날을 보고 합의를 구해 주시는 기구를 저희들 힘으로 만들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해 주시면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철하겠습니다.

또 수업시수와 연관해서는 사실 전교조하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전교조가 좀 너무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아까 “십칠점몇 시간인데 18시간으로 교육부가 오히려 올렸다” 그것은 좀 난센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실제로 26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학교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이것을 별안간 18시간으로 만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6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숫자가 5500명입니다. 그러면 6만 명으로 하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걱정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 의역을 하면 그 시간 이상은 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1년에 최소한 2700억이 듭니다. 저희들이 따져 봤어요.

이것은 기획예산처가 전혀 말도 안 된다고 그러합니다. 저희들이 해 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게도 저희들이 정말 아주 간청을 합니다. 현실적인 안을 갖고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들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경우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영 위원 전교조가 수당을 더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확인된 말씀이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길 말고는……

○이인영 위원 그러면 추론이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추론이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확실한 의도라고 저희들은 읽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나친……

아, 초과수당을 달라고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추론 수준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상입니다.

○지병문 위원 보충말씀 가능합니까?

○위원장 황우여 보충질의하시지요.

○지병문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부분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이 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십여 년 동안 우리가 국립대학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국립대학이 너무 숫자가 많고 학생은 적고 경쟁력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연합대학으로 통합하든 해서 경쟁력을 높이자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오면서도 지난 기간 동안 계속 보면 통합해야 될 대학들에 새로운 과를 신설해 주고 새로운 교수 티오를 주어서 교수를 새로 뽑고, 그럴수록 통합은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결국 현재 우리 국립대학은 너무 방만하고 숫자도 많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통합이 안 되고 연합대학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길 외에는 없다고 판단되면 사실 고사시킬 대학은 고사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 끌고 가고 과 만들어 주고 하거든요.

앞에 말씀하신 총장선출 문제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십여 년

동안 볼 때 별 진전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내리면 사실 수이나 경쟁력을 따져 볼 때 없애야 될 과라고 판단되고 너무 많아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과들에 대해서는 티오를 안 줘야 돼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병문 위원 그런데 계속 주고 이것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수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통폐합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향을 우리가 수립했으면 교육부에서는 그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교수 티오를 주고 새로운 과를 만드는 부분들을 허용을 안 하고 사실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교육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으로 새로 와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그런 대상 대학에 대한 시설 확충이라든가 정원 늘리고 과 늘리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점은 정말 단호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군현 위원 첫 번째는 지금 전국에 약 6700여 개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양호교사가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보건교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6개 교육청에 보건교사 전문직 출신들이 장학사로 있어가지고 실제 보건교사가 무엇을 하는지 업무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내에는 현재 보건교사 출신, 즉 전문직 출신의 장학사든 연구사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출신을 하나 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학교 내 교육 주체들 간의 폭력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제 생각에 정책협의회든지 대책협의회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월 창원에서 왕따 동영상 사건이 있어 가지고 교장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도 학부모가 교장을 폭행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평택에서도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혀 가지고 교사가 또 자살을 했어요. 경기도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것이 동영상에 잡혔고 또 경북 지역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패륜적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체들 간의 정책협의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한번씩 모여서 의논을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마지막으로 구논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아까 제 질의하고 정봉주 위원님 질의 시의 장관님 답변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아까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속에, 다시 말해서 교육특구에는 외국인학교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저한테는 답변을 주셨는데 정봉주 위원의 똑같은 질의에 “외국인학교는 허용하겠다, 외국교육기관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구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내국인도 다닐 수 있는 외국인학교라고 물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는 물으신 것이 명백해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외국인학교는 가능합니다. 내국인이 다닐 수 없는 학교가 그것입니다.

○구논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건의 겸 부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외국교육기관들이나 외국인학교들이 몰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법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미 만들어 놓았고, 다시 말해서 대학까지는 좀더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초·중등의 유아교육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상업화하는 문제로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도 외국인학교들이 가능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입법은 안 되었지요?

○이군현 위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요.

○구논회 위원 입법예고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재벌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도 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다시 말해서 경제계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교육계 전체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교육에 큰 파행이 올 수 있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 겸 질의를 더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리법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든 반대이고 그것은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부에서 오랜 토론을 하면서 얘기한 것은 경제자유구역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에 한해서 기회를 마련하겠다, 기타 다른 지역에 이것이 열풍처럼 번져가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아직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쪽이나 이런 데하고 ……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러면 저희들 권한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사안들은 아주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따로 얘기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이수일 학교정책실장 이수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인천외고 학내 분류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책위원회와 인천외고정상화범시민수습위원회를 6월 16일 구성·운영했으며 또 6월 16일에

서 26일 사이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더불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근에는 직원 3명이 학교에 상주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인천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5일 부랴부랴 교육감이 20일까지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학교장해임권고안을 내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했다는 데 맞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30일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고 5일에는 20일까지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학교장해임권고안을 내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학교장의 해임권고, 관선이사 파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학생을 선동하여 수업 거부와 폭력투쟁을 일삼는 교사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교 측은 파면 교사 2명에 대해 학교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업 복귀를 종용하여 수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네 번째로 타 학교 교사의 개입, 민주노총 노조원까지 가세해 문제가 더욱 커진 인천외고 사태를 교육당국에서는 무엇하였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으로 같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의는 부총리는 앞으로 인천외고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기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우여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종료가 안 됩니다.

○복기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저는 표준수업시수하고 교원법정정원 문제하고 또 교육재정하고 연동되어 물었는데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 부분을 전교조의 요구 사항, 이런 협상으로만 말씀하셔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문제 이것이 갖는 긍정성이 무엇인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느 특정 집단의 요구에 맞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교육부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아니고요.

○복기왕 위원 그래서 저의 요청사항은 법제화가 갖는 긍정성과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교원정원도 80%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과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의 취학률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당당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원평가 제도에 대한 제 질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나갔거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는다면 NEIS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들이 있을 때 “교사들이 경쟁 체제를 갖고 긴장해라”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경쟁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봉주 위원 “긴장해라”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MBC기자가 묻는데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냐” 이럴 때 발언이……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바운드되어서 정책에 대해서 타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특히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에 나갈 때는 대단히 신중하고 정책적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사려 깊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이 중요한 정책이 협의 없이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점을 미리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요, 앞으로 정책결정하실 때 신중한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위원장으로서 여기는 상임위기 때문에 당의 정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여기는 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으로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고 또 이석하신 위원님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의정질의 준비하실 시간을 위원님들께 못 드렸습니다. 원 구성이 어제 늦게 결정된 탓으로 시간의 부족을 느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나 훌륭하신 고견과 식견 그리고 진지한 질의 내용으로 충실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우리 첫 번째 상임위를 빛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진지한 보고와 특별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17대 국회에서 계속 유지되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따가운 질의나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모두 우리 교육에 대한 높은 애정과 또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한 성원과 기대에서 나온 질의라고 봐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곽성문 구논회 권철현 김영숙  
백원우 복기왕 안상수 유기홍  
이군현 이인영 이주호 정몽준  
정봉주 조배숙 지병문 진수희  
황우여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전문위원 천병호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차관 서범석  
차관보 정기언  
기획관리실장 김영식  
학교정책실장 이수일  
인적자원총괄국장 정봉근  
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인적자원관리국장 이종갑  
국제교육정보화국장 박경재  
공보관 정영선  
감사관 이종서  
학교정책심의관 유영국  
교육복지심의관 정석구  
정책보좌관 하연섭  
비서실장 우승구  
총무과장 황홍규  
교육현장지원단장 이경복

○其他參席者

대한민국학술원장 황인철  
사무국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 구관서  
교원징계심사위원장 오성삼  
국제교육진흥원장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장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김여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 박관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기호

○出席委員(17人)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	현	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김	영	찬
서울대학교병원장	성	상	철
경북대학교병원장	전	수	한
전남대학교병원장	황	태	주
부산대학교병원장	박	돈	규
전북대학교병원장	양	두	현
충북대학교병원장	김	승	택
충남대학교병원장	이	준	규
경상대학교병원장	박	철	수
제주대학교병원장	홍	강	의
강원대학교병원장	김	근	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	범	석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장	영	일

**【報告事項】**

**○委員選任**

열린우리당

구 논 회 백 원 우 복 기 왕 유 기 홍  
이 인 영 정 봉 주 조 배 숙 지 병 문  
최 재 성

한나라당

곽 성 문 권 철 현 김 영 숙 안 상 수  
이 군 현 이 주 호 진 수 희 황 우 여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

정 몽 준 최 순 영

(7월5일)

**○議案回附**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

(6월18일 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

(6월18일 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6월28일 김영숙·임인배·박혁규·김성조·배일도·허천·공성진·김문수·박계동·이재오·엄호성·박순자·김무성·김선미·홍준표·이상배·황우여·이계진·박명광·홍문표·김애실·임태희·황진하·안명옥·김병호·조경태·김형주·진수희·안경률·오제세·노현송·정병국·김태환·이상락·심재철 의원 발의)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7월2일 이종걸·황우여·최인기·유재건·이상락·박홍수·김현미·김영춘·김영주·민병두·노현송·이상열·백원우·김태환·조

정식·오제세·안상수·박계동·엄호성·주호영·김낙순·김원용·유시민·장향숙·김덕규·안병엽·김영숙·김기현·오영식·이철우·김석준·단병호·박병석·김형주·김태홍·심재철·장복심·김성곤·조배숙·이석현·서재관·정몽준·양형일·김충환·이재창 의원 발의)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韓國精神文化研究院育成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6월2일 정부 제출)

史料의蒐集및보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월9일 정부 제출)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6월23일 정부 제출)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월30일 정부 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월3일 정부 제출)

이상 10건 7월5일 회부됨

**○關聯議案回附**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월31일 안명옥·김석준·전재희·박순자·심재철·이재오·이군현·공성진·주성영·김문수·이계경·박계동·고진화·박희태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안

(6월3일 정부 제출)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월18일 정화원·권철현·심재철·나경원 의원 외 40인 발의)

이상 3건 7월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